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(303건) 및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(151건)

2016. 5.

국무조정실
경기대응을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 (303건)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</td>
<td>보전지역내 기존 공장 중설 허용(한시)</td>
<td>보전지역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활성화 및 부담 완화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녹지·관리지역 등 보전지역은 공장중축 등이 제한되고 20% 건폐율이 적용되나 지정 이전 공장은 16.12.31까지 40% 적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기존공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‘18.12.31까지 연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</td>
<td>개발재환경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(항구)</td>
<td>개발재환경구역 내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부담 완화</td>
<td>개발재환경구역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개발재환경구역 지정 이전의 공장을 ‘물류창고’로 용도 변경하여 중축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기존 공장을 ‘물류창고’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%까지 중축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</td>
<td>개발재환경구역 내 공장장 설치지역 확대(항구)</td>
<td>수도권 및 광역시 개발재환경구역주민의 악영향해소</td>
<td>개발재환경구역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수도권과 광역시는 개발재환경구역 내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장장 설치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장장 설치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4</td>
<td>공장 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활성화(항구)</td>
<td>신설 투자 및 일자리 증가</td>
<td>산업진입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공장의 용도 외 활용은 태양광 발전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태양광 뿐만 아니라 ‘바이오에너지’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추가로 인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5</td>
<td>가설 건축물 축조 제한 완화(한시)</td>
<td>공장건물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활동 부담 경감</td>
<td>건축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공장의 용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공장 용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2년간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6</td>
<td>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(한시)</td>
<td>사업체주자 부담 완화 투자 유발</td>
<td>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('16.9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건축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수도권은 10%, 그 외는 5%를 의무 임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지식산업센터 의무임대 비율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7</td>
<td>도로 관련 숭박시설 임지제한 한시적 유예(한시)</td>
<td>기존 관광호텔 등 증축 불편 해소,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응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'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계획관리지역에서 숭박시설은 도로와 숭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(50m)이 적용되어 숭박시설 중축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숭박시설 중 기존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 등)에 대해서는 증축을 허용하고, 기존 일반숙박시설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중축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8</td>
<td>○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(한시)</td>
<td>관광펜션업 활성화</td>
<td>관광진흥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문체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3층 이상 건축물일 것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층수제한은 4층 이하로 2년간 한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9</td>
<td>○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완화(한시)</td>
<td>쌀가공산업자에게 원료 안정적 공급</td>
<td>쌀 가공산업 품목 및 식용 쓰기 관련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반(一圃)의 토지로 재배면적 10만㎡ 이상 이어야 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면적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의 재산단지 구성 시 '가공용 쌀 재배단지'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2년간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0</td>
<td>○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일부 허용(한시)</td>
<td>약 44개소 현장, 5,700억원 경제적효과</td>
<td>산림보호법 (16.9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,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해 광산채굴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1</td>
<td>○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제 완화(항구)</td>
<td>지역개발사업 투자 활성화</td>
<td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행자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 문화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관광 문화시설 등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2</td>
<td>○ 공유재산 장기부대 범위 확대(항구)</td>
<td>관광 문화시설 유지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</td>
<td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행자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는 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의 경우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공장, 연구시설 외에도 그 지원시설,관광 문화시설 등을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장기 대부 범위에 포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</td>
<td>○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(항구)</td>
<td>민간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여 폐교 활용 촉진</td>
<td>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률 (16.9월)</td>
<td>교육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·대부 대상 일부 사업* 한정 및 지역주민 요건**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교육 사회복지·문화·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 **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지역주민 요구 제한을 폐지하고, 사업 대상 범위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</td>
<td>○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종 비율 하향조정(항구)</td>
<td>전문농공단지 지정 활성화</td>
<td>농공단지 통합 지침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는 동일·유사·연관 업종이 60%이상을 차지해야 지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전문농공단지 지정기준을 50%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5</td>
<td>◦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기업 입주 요건 완화(항구)</td>
<td>서비스형 외국 투자지역 지정 활성화</td>
<td>외국인투자 지역 운영지침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서비스형 투자지역 입주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원인 30인 이상 요건 중축해야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금융보험업, 지식서비스업, 산업지원서비스업 등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상시고용원인 15인 이상으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6</td>
<td>◦ 부지별 태양광 공급징수 가중치 제도 개선(항구)</td>
<td>폐기물매립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</td>
<td>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(16.5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태양광은 설치용량에 따라 일반부지 설치시 07-12,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에 설치시 10-15 가중치가 부여되나, 폐기물 매립시설은 일반부지로 간주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차단형 폐기물 매립시설은 기존 시설물로 인정하여 가중치 인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7</td>
<td>◦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수행요건 완화(항구)</td>
<td>산단 내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</td>
<td>산업집적법 (169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산업단지 내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 후에도 가능하므로 자산관리공사(캠코)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산단 내 실현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캠코가 공장설립 완료하고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</td>
<td>◦ 농업진흥구역 내 기존공장 업종 확대(항구)</td>
<td>농업인 소득 증대·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</td>
<td>농지법 시행령 (166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공장시설을 농수산물가공처리,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농업진흥구역에 기 설치된 공장 중 10년 이상된 시설은 농기계, 농약 제조 등 농수산업 관련 공장으로 변경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9</td>
<td>◦ 개간농지 전용제한 기간 완화(항구)</td>
<td>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</td>
<td>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(166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개간사업은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농지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10년간 전용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개간농지에 대한 전용제한 기간을 「산지 관리법」을 준용 5년으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0</td>
<td>◦ 농어촌민박사업 인증제도 확대(항구)</td>
<td>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</td>
<td>농어촌정비사업 시행규칙 (16.11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적 250㎡ 미만의 향토 단독주택(또는 다가구주택)에 한해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전통적 농가주택들이 본체 외에 행랑채 등 별채를 포함하는 구조로 건축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감안, 주거공간의 부속건물까지 인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- 6 -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1</td>
<td>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(양구)</td>
<td>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</td>
<td>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(20마력 이하)하고, 건물 옥상 등에 한정하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어로행위에 이용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을 없애고,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장소 추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2</td>
<td>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(양구)</td>
<td>음식점, 숙박시설 이용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</td>
<td>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는 면적 400㎡ 이상 숙박, 식품접객업, 800㎡ 이상 오수배출시설은 입지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(20마력 이하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업 가능한 전기동력선의 마력 제한(20마력 이하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3</td>
<td>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지 경시도 기준 완화(양구)</td>
<td>일반토지로 둘러 둥어 있으나 개발이 불가한 산지의 개별제한 완화</td>
<td>산지관리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산지경시도 25도 이하이고 전체 경시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40%이하인 경우로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산지경시도 25도 이하이고 전체 경시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40%이하인 경우로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</td>
<td>백두대간내 산지축산 부대시설 설치 허용(양구)</td>
<td>백두대간에 위치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활성화</td>
<td>산림청법 시행령 (16.9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백두대간 보호지역(대관령 등) 목장은 부대시설 설치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백두대간 완충구역내 목장용지(235ha)에 대해서는 축산 부대시설 설치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축산체험시설, 축산판광시설, 간이휴게시설 등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5</td>
<td>국유림을 이용한 숲속야영장 허용(양구)</td>
<td>지역사회의 소득증대 및 민간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</td>
<td>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공동산림사업이나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‘숲속 야영장’이 포함되지 않아 국유림을 이용한 ‘숲속 야영장’ 설치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공동산림사업 및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요건에 ‘숲속 야영장’ 포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6</td>
<td>산림보호구역내 농경지 지정폭 등 범위 허용(양구)</td>
<td>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</td>
<td>산림보호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정폭 범위가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정폭 범위를 포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7</td>
<td>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시 경계표시 의무 완화 (항구)</td>
<td>타당성 조사 불편 해소 및 표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</td>
<td>산지관리법 시행령 (‘16.6월)</td>
<td>산림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시 타당성 조사 신청자에게 해당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해당구역 경계표시 의무규정 삭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</td>
<td>소규모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대상 제외 (항구)</td>
<td>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제공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‘16.10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경계표시의무 부여</td>
<td>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발행위허가 혼선 방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경계표식의무 부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</td>
<td>개발행위허가 기준 명확화 (항구)</td>
<td>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(항구)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‘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개발행위허가 시 임상 측정방법을 지자 체계로 입목축도와 입목본수도를 혼용하여 지정 이전 기준 공장은 ‘16.12.31까지 40% 적용</td>
<td>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질 오염 방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도로 일원화</td>
<td>투자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0</td>
<td>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(항구)</td>
<td>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부담 완화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‘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마을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</td>
<td>적법 흐름에 대한 제한을 해소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1</td>
<td>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 (한시)</td>
<td>창의적인 한옥건축물의 수요 확대</td>
<td>국토계획법 시행령 (‘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보전·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%의 건폐율을 적용이나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은 ‘16.12.31까지 40% 적용</td>
<td>관리지역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및 부담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기존 공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‘18.12.31까지 연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2</td>
<td>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개선 (항구)</td>
<td>토지의 적성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령 (‘16.12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다락은 높이가 1.8m이하인 경우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</td>
<td>창의적인 한옥건축물의 수요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한옥건축물의 다락은 높이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3</td>
<td>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용도지역 변경 제한 완화 (항구)</td>
<td>비도시지역에 개발 대상지역 확대로 투자확충을 유도하면서도 계획적인 개발</td>
<td>국토부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개발행위허가 완료된 지역이라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역에 포함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적법취득순절 등에 대해서는 입안 구역에 포함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4</td>
<td>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제한 완화 (항구)</td>
<td>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부담완화</td>
<td>주택법 시행령 (‘16.12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5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(단지형 연립·다세대)의 경우 임대도로 폭이 6m 이상이 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임대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, 도로 2개폭의 합계가 10m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35</td>
<td>◦ 가로구역의 범위 확(항구)</td>
<td>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</td>
<td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모든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도록 규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소규모로 노후·불량주거지를 개량하는 사업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,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현황 도로(6m 이상) 등을 접해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6</td>
<td>◦ 개발해양구역 해체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(항구)</td>
<td>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기간 단축 (약 1년)</td>
<td>개발해양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개발해양구역을 해체하여 도시개발구역, 물류단지, 관광단지, 연구특구 등 지정 시 해체 절차 추진 후 후속절차가 진행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‘계획안정, 주민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’ 등 중복 절차는 해체절차 추진 시 동시에 진행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7</td>
<td>◦ 증소기업 전용단지 의무확보 면제(항구)</td>
<td>산업단지등 분양환경화 및 입지규제 완화</td>
<td>개발해양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복구하려는 해체증인 신청 시 지역범위를 동일 시군구 10km 내 및 인접시군 구 5km 내로 규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지역범위를 해체대상이 속한 광역으로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8</td>
<td>◦ 개발해양구역 내 취소전 계획개발이익 확대(항구)</td>
<td>개발사업자 투자 부담해소</td>
<td>개발해양구역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복구하려는 해제증인 신청 시 지역범위를 동일 시군구 10km 내 및 인접시군구 5km 내로 규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지역범위를 해체대상이 속한 광역으로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9</td>
<td>◦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등 이축 시 규모제한 완화(항구)</td>
<td>주민의 주거 및 생활불편 해소</td>
<td>개발해양구역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개발해양구역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(이축)시 연면적 232㎡ (지정시 건축주: 300㎡) 이하로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철거당시 기존 규모만큼 건축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40</td>
<td>◦ 개발해양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(항구)</td>
<td>난방비 절감 및 생활환경 개선</td>
<td>개발해양구역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개발해양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범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 시설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 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41</td>
<td>◦ 지역특산물 가공·판매·체험시설 설치주체 확대(항구)</td>
<td>지역특산물 판매·체험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</td>
<td>개발해양구역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지역특산물 가공·판매·체험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지역당시 거주자만 설치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·판매·체험시설 설치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42   |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시설 설치 완화 (항구)  
- (현행)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지하수 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해야 함  
- (개선)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없이 설치 허용 |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농업활동 불편 해소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(16.6월) | 국토부 |
| 43   |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지하수시설 설치 허용(항구)  
- (현행) 개발제한구역내 지하수 개발은 영농을 위한 경우만 허용  
- (개선) 기존 주택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주택대지 안의 지하수 시설 허용 |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44   |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(항구)  
- (현행)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면적 또는 토지질 변경를 10% 이하인 경우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시·도지사가 승인  
- (개선) 건축면적 20% 이하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시·도지사가 승인 | 관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 |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('16. 6월) | 국토부 |
| 45   | 국방·군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(항구)  
- (현행) 국방·군사시설 신,증,설 시 3급 이상 보안 시설만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혼의로 같은 규제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 | 국방·군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정차가 간소화되어, 적시에 시설건립 |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(16.6월) | 국토부 |
| 46   |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 완화(항구)  
- (현행)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의 주 교통 수단에 철도·항공·여객선 포함  
- (개선)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기준의 주 교통 수단에 버스 추가 |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 활성화 및 환승편의 제고, 지역 복합개발 기대 |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(16.6월) | 국토부 |
| 47   | 대지인의 공지기준 완화 유예(항구)  
- (현행)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(최대 6미터) 건축  
- (개선) 공장 건축 시에서는 대지 내 공지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| 기업활동 부담 완화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48   | 의료시설 건축물 규제완화(항구)  
- (현행)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병원에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의료 입점 시 용도변경 신고 필요  
- (개선) 건축물 사업특성별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지정 가능 | 별도 용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 불편감 소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49   | ◦ 건축신고 대상 확대(항구)  
- (현행) 중요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 등 원활한 '작물재배수'와 유사한 연속 건축허가 필요  
- (개선)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"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"의 중요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 등의 원활(연면적 400㎡ 이하) 추가 | 건축신고 대상 확대로 국민 불편 감소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50   | ◦ 집단급식소 내 카페설치 허용(항구)  
- (현행) 집단급식소 내 카페영업 시 건축물 용도 변경 필요  
- (개선) 후생복리란의 제공 및 전용 카페에 대비하는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집단급식소 내 카페 허용 | 근로자 주거지역 증진에 기여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51   | ◦ 공사 중인 건축물을 임시 가설사무실 용도로 사용 허용(항구)  
- (현행) 조경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운영이 필요하다 및 건강증진에 부여  
- (개선) 조경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관한 임시 사무실로 사용 가능 | 공사는 공사지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52   | ◦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재해방전수 검토협의의 부담완화(항구)  
- (현행)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사전재해방전수 검토협의 대상(5,000㎡이상) 적용  
  * 협의서 1건 작성시 약 1천만원의 비용과 60일 소요  
- (개선)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재해 방전수 검토협의의 대상 축소 | 개발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| 사전재해방전수 검토협의 실무지침 (16.6월) | 안전처 |

1-2 창업진입
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53   | ◦ 관광식당업 지정 인적요건 완화(한시)  
- (현행) 외국인등의 경우 우리나라 해당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조리경력 3년 이상 요구  
- (개선) 조리경력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| 외국 음식전문 관광식당(서울소재)기준,94% 고용 활성화 |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(16.6월) | 문화부 |
| 54   | ◦ 여행업체의 자본금 기준 완화(한시)  
- (현행) 일반여행업 2억원, 국외여행업 6천만원, 국내여행업 3천만원  
- (개선) 현재 자본금 1/2로 2년간 한시 완화  
  * 일반여행업 1억원, 국외여행업 3천만원, 국내여행업 1,500만원 | 창업부담 완화로 여행업 창업 등록증가(연 20%) | 관광진흥법 시행령 (16.6월) | 문화부 |
| 55   | ◦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설기준 완화(한시)  
- (현행)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설기준이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 
- (개선)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 완화 | 관광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| 관광진흥법 시행령 (16.6월) | 문화부 |
순번 | 과제명/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개정 법령 (개정시기) | 소관부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</th>
<th></th>
<th></th>
<th>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56</td>
<td>◦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한시 휴예(한시)  - (현행) 옥외광고업 등록 시 반드시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도록 명시  - (개선)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확보규정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</td>
<td>옥외광고업 창업부담 경감 및 추가 일자리 창출</td>
<td>옥외광고업 등 관리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행자부</td>
</tr>
<tr>
<td>57</td>
<td>◦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(한시)  - (현행) 공공기관 중소 급식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대기업 입찰참여 배제  - (개선) 상주인원 1천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 참여 허용</td>
<td>적극 규제 완화 및 역지상별 해소</td>
<td>공공기관 구내 식당 중소·중견 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 (16.9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58</td>
<td>◦ 사회적 기업 목적 실현 관련기준 완화(한시)  - (현행)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의무 50%에서 한시적으로 30%로 완화(16년말)  •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동시 제공시 20%  - (개선) 한시적 완화 기간을 2년 추가 연장</td>
<td>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률 약 20% 향상 기대</td>
<td>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고용부</td>
</tr>
<tr>
<td>59</td>
<td>◦ 생활폐기물 수집장비산업의 장비기준 완화(한시)  - (현행) 생활폐기물 수집장비산업의 허가 시 장비 기준에 미달식 운반차량의 적재능력을 합계를 15㎥ 이상으로 규정  - (개선) 적재능력 규정적용을 2년간 유예</td>
<td>수집·운반업 허가 비용 절감</td>
<td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60</td>
<td>◦ LH 매입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 완화(한시)  - (현행) LH 매입 미분양주택 중 6월 이상 미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·군부대·공공기관의 직원사례 또는 기숙사 등 16.08.22까지 공급 가능  - (개선) 추가로 19.08.22까지 3년간 연장 적용</td>
<td>국민주택의 제공</td>
<td>LH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61</td>
<td>◦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지정 요건 완화(한결)  - (현행)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지정대상을 금융결제원 및 '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'으로 한정  - (개선) 업무대행기관의 '전자문서의 유통·관리·보관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'을 추가</td>
<td>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기업 확대</td>
<td>수입인지법 시행령 (16.5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62</td>
<td>◦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 주체 확대(한결)  - (현행) 국유재산감정감정평가 수행주체가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- (개선) 국유재산감정평가 주체를 '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'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확대</td>
<td>법인 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자리 창출</td>
<td>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63   | □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 확대(항구)  
      - (현행)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
      - (개선)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| 법인 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자리 창출 | 공기업·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(16.6월) | 기재부 |
| 64   | □ 파생상품시장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파생상품시장의 전문투자자 요건 엄화  
      * 전문투자자 :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인 자  
      - (개선)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  
      ① “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& 연소득 1억원 이상”  
      ② “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& 충지산 10억원 이상” | 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|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16.6월) | 금융위 |
| 65   | □ 투자자문업자 전문 기술력 활성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증권, 파생상품 등을 취급하는 투자자문업의 최저자본금은 5억원  
      - (개선) 일자리 창출 공기업· 준정부 기관 계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, 자본금은 5→1억원으로 완화 |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 업황성화 | 자본시장법 시행령 (16.10월) | 금융위 |
| 66   | □ 재활용기업의 당사자 관리 강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재활용기업 당사자 관리 강화  
      - (개선) 재활용기업 당사자 관리 강화 | 업종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| 67   | □ 투자자문업자 전문 기술력 활성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투자자문업자 전문 기술력 발전  
      - (개선) 투자자문업자 전문 기술력 발전 | 업종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| 68   | □ 전기공사업 동록기준 완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전기공사업 동록기준(자본금 2억원, 사무실 25㎡, 1명 이상 전기공사업기사)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 
      - (개선) 전기공사업 동록기준 완화(자본금 1-1.5억원, 사무실 면적 30㎡ 또는 1명 이상) | 소규모 전기공사업자 경제적 진입 및 신규창업 지원 |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(16.12월) | 산업부 |
| 69   | □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 자격기준 완화(항구)  
      - (현행)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 자격기준  
      - (개선)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 자격기준 | 소비량 확대 및 정부양곡 재고 감축, 다양한 산업수요 발굴 |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농식품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70   | ◦ 인삼검사원 자격기준 확대(양구)  
- (현행) 인삼검사원 자격기준을 이·화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  
- (개선) 식품·농화학 관리 자격 보유자까지 확대 | 관련분야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 및 인삼검사원의 다양성 확보                  | 인삼산업법 시행령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71   | ◦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완화(양구)  
- (현행)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신청시 고가장비인 감마핵증분석기를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의무화  
- (개선) 방사능 물질 장비 설치 기관 등과 이용계약으로 감독 할 수 있도록 개선 | 농산물검정기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| 농수산물질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72   | ◦ 산양살 제매 사용허가 요건 완화(양구)  
- (현행) 산양살 제매을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는 마을주민 1/2이상의 연령등의사 제출 필요/산양살 제매 시 10ha까지 국유림 대부  
- (개선) 연령등의사를 마을주민 1/3으로 완화,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유림 대부 등 면적을 100ha 이내로 확대 |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| 국유재산관리 규정 (16.6월) | 산림청 |
| 73   | ◦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상심리상담관 자격완화(양구)  
- (현행) 임상심리상담관의 자격요건 : 대학 등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
- (개선) 심리학 이외에 아동복지, 상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또는 자격 추가 |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및 일자리 확대 | 아동복지법 시행령 (16.6월) | 복지부 |
| 74   | ◦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가능 가족 범위 확대(양구)  
- (현행)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제한받는 본인 가족의 범위에 민법상 가족 의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 포함  
- (개선) 급여 제공 제한 대상에서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를 삭제 | 국민불편해소 및 가족지원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제공 확대 |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(16.6월) | 복지부 |
| 75   | ◦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술능력 인정 허용 (양구)  
- (현행)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자 업무 업무 요구와 관련한 기술능력으로 불인정  
- (개선) 건설업 업무 기준에 육아휴직자도 기술능력으로 인정 | 여성 기술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및 출산장려,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 | 전산산업기본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76   | ◦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(양구)  
- (현행)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 점검형비 구비 및 배출구의 가로, 세로, 간선 위부 부담  
- (개선)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 삭제 | 소방시설관리업체 교정검사비용 부담완화(698개소) | 소방시설법 시행령 (16.6월) | 안전처 |
| 77   | ◦ 소방시설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 완화(양구)  
- (현행) 소방시설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을 소방분야 기술자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얇게 제한  
- (개선) 응시자격을 유사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유자(건축, 전기기사 등)까지 확대 | 양질의 소방점검 서비스 선택 확대 | 소방시설법 시행령 (16.6월) | 안전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78   | ◦ 보방시설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횟수 확대(항구)  
- (현행) 보방시설관리자 시험은 2년에 1회 실시  
- (개선) 1년에 1회 실시로 시행 기회 확대 | 수험생의 제출시스템 기회 보장 등으로 청년실업해소가 기대  
포차별랙업원을 이용한 이용대상자 횟수 확대 | 보방시설법 시행령 (16.6월) | 안전처 |
| 79   | ◦ 총포 부품 제조업소 개조시설 기준 완화(항구)  
- (현행) 총포부품 제조업소 완성품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 
- (개선) 총포부품 제조업자는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만 갖추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기준 완화 | 부품제조업 활성화  
포차별랙업원을 이용한 이용대상자 횟수 확대 |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시행령 (16.6월) | 경찰청 |
| 80   | ◦ 자동화산업자 대상자 확대(항구)  
- (현행) 자동화산업자 대상자 확대  
   ①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부에 기재한 자동화산업자  
   ② 제조업자로 보정된 자동화산업자  
- (개선) 자동화산업자 대상자 확대 | 출입국자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사정 혼잡 완화  
부품제조업 활성화  
포차별랙업원을 이용한 이용대상자 횟수 확대 |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(16.6월) | 법무부 |
| 81   | ◦ 미국비자 소지 한국경유 사이판 출/입국 중인 관광객 입국비자 면제(항구)  
- (현행) 비공민동체 입국비자를 미수요 시 사합으로 적용  
- (개선) 비공민동체 입국비자를 미수요 시 사합으로 적용 | 환승관광 화약 추진  
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구인해석 (16.5월) | 환승관광 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구인해석 (16.5월) | 법무부 |
| 82   | ◦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절차의 완화(항구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절차에 대한 규제 변경  
- (개선) 위탁생산 절차에 대한 규제 변경 | 위탁생산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  
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 감소 | 위탁생산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83   | ◦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(항구)  
- (현행) 식품운반업의 영업 신고 시 운반시설, 세차시설, 차고 및 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
- (개선)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 개정에 따라 운수업자 중 소규모 운송업자 대상으로 개선 | 식품운반업자의 불필요한 사무소 설치비용 절감  
식품운반업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84   | ◦ 무인 이동체 무인차 허가 절차개선(항구)  
- (현행) 새로운 종류의 무인차 허가 시 반드시 시험령 개정이 필요하여 신속한 지원 불가  
- (개선) 드론, 무인차량과 고출력 드론물도체에 대한 무인차 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| 고출력 무인차량에 대한 무인차 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| 전파법시행령 (16.6월) | 미래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85   |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(현시)  
- (현행) 산업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농지보전부담금이 100% 감면  
- (개선)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(2년간)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| 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| 농지법 시행령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86   | 산업단지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(현시)  
- (현행) 준비전산지에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% 감면  
- (개선)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(2년간)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| 부담금 한시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| 산지관리법 시행령 (16.6월) | 산림청 |
| 87   | 지역개발사업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(현시)  
- (현행) '농지법 시행령'에는 '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부담금 감면 조항 부재  
- (개선) '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'농지법 시행령'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 | 낙후지역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| 농지법 시행령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88   | 지역개발사업구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(현시)  
- (현행) '산지관리법 시행령'에는 '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부담금 감면 조항 부재  
- (개선) '지역개발지원법'에 따른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중 관광단지,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| 낙후지역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| 산지관리법 시행령 (16.12월) | 산림청 |
| 89   |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(현시)  
- (현행) 항공기 검사증명, 수리조교수증 및 형식증명서 등 발급자 확인 및 비정기 항공검정 또는 국토교통부에 첨부 수수료 납부  
- (개선) 검사증명 및 수리조교수증 등과 관련된 민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년간 감면 | 경제적 부담 완화 |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고시 (16.6월) | 국토부 |
| 90   | 지하수 분야 관련 수수료 유예(현시)  
- (현행) 지하수 개발, 이용, 저장 및 지하수 관련 업을 동등시 일정금액 수수료 부과  
  * 개발, 이용, 저장에 관한 신규 3만원, 연장 1.7만원, (업등록) 신규 5만원, 변경 3만원  
- (개선) 개발·이용·저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연 등에 관한 수수료 면제 | 사업자 부담 완화 | 지하수법 시행규칙 (16.6월) | 국토부 |
| 91   |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(현시)  
- (현행) 승강기 확인검사 시행 규정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조건부 합격 조치하고 일정기간 후 확인검사 실시  
  * 검사수수료 2만원 부과  
- (개선) 조건부 합격 후 실시하는 확인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 | 약 105천 개소 현장, 21억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 | 수수료 확인검사 효율화 지원 (16.6월) | 안전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92   | ◦ 해양심층수 관련 사용료, 부담금 감면(한시)  
  - (현행) 해양심층수의 취수관설치, 원수취수,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됨  
  - 공유수면 점, 사용료, 취수사업비, 이용부담금  
  - (개선) 향후 5년간 공유수면 점, 사용료, 부담금 전액 감면 | 해양심층수 제조·판매업자 부담 완화 |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 | 해수부 |
| 93   | ◦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(항구)  
  - (현행) 낙동강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미비  
  - (개선)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적으로 하천수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(발전 사업가, 냉각수료 사용 등) 감면규정 신설 |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|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 | 환경부 |
| 94   | ◦ 급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(항구)  
  - (현행) 급강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미비  
  - (개선)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적으로 하천수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(발전 사업가, 냉각수료 사용 등) 감면규정 신설 |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| 급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 | 환경부 |
| 95   | ◦ 영산강-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감면(항구)  
  - (현행) 영산강-섬진강 분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미비  
  - (개선)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적으로 하천수 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 이용시(발전 사업가, 냉각수료 사용 등) 감면규정 신설 | 공익적 목적 사용시 경제적 부담 완화 | 영산강-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 | 환경부 |
| 96   | ◦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 연장(한시)  
  - (현행)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소·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 도래(16년말)  
  - (개선)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2년간 한시 연장 | 연간 약 921개 사업장, 120억원의 경제적 부담완화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12월) | 환경부 |
| 97   | ◦ 물류단지 분양시설 시설부담금 부과 제한(항구)  
  - (현행)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총담을 위해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토지·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  
  - (개선) 토지·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| 부담금 이중부과를 해소하여 물류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|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16.12월) | 국토부 |
| 98   | ◦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제외(항구)  
  - (현행)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시 개발비용의 25% 이상 재투자와 개발 부담금이 중부담  
  - (개선) 산업단지 구조고도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| 사업자 영업활동 부담 완화 |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 규칙(운영) (16.6월) | 국토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99</td>
<td>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(항구)</td>
<td>도로건설 및 공사 또는 농어촌도시개발과 소관 건설활동 및 실시설비에 대한 부담금 감면</td>
<td>개발제한구역법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부담금 제도 시행(99년) 이전에 설치된 도로 등 임지시설이 제차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어,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일반사업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</td>
<td>개정시기, 개발중지 시점(법령)</td>
<td>개발제한구역법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부담금제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도로 등이 부과된 보전부담금은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에 대한 부담금 요율 축소(100% → 50%)</td>
<td>개정시기, 개발중지 시점(법령)</td>
<td>개발제한구역법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00</td>
<td>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(항구)</td>
<td>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</td>
<td>개발이익 환수에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일정 기준면적 이상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 부담금 부과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특별시·광역시 도시지역: 660㎡, 특별시·광역시외 도시지역: 990㎡, 도시지역외 지역: 1,650㎡</td>
<td>부담금 면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td>
<td>개발이익 환수에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조정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, 공장용지조성 등 소규모 개발사업 감면 대응 확대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01</td>
<td>소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확대(항구)</td>
<td>부담금 면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td>
<td>중소기업진흥에</td>
<td>중기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장설립 시 부과된 부담금이 면제되나,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중기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공정의 범위를 산업집적법상 공장(건물)까지 포함하여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중기부</td>
</tr>
<tr>
<td>102</td>
<td>해양환경자원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허용(항구)</td>
<td>부담금 면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</td>
<td>해양환경관리법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해양환경자원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분할하여 납부 가능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103</td>
<td>소규모 해수 인수관 사범용료 부과체계 마련(항구)</td>
<td>양식장 등 해수 인수관 사범용료 부과체계 마련</td>
<td>중소기업진흥에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인수행위에 대한 점용료: 사범용료 산정방식은 '관의 지름'을 기준으로 100mm, 200mm, 100mm이하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정리 한다.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관의 지름 100mm이하의 경우는 10m단위임에 1만원 적용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령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104</td>
<td>도시가스사업자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 감면(항구)</td>
<td>농어촌지역가스사업자의 농업기반시설 목적 및 사용료 감면를 적용</td>
<td>농어촌지역가스사업자 및 농업기반시설주 업체를 위한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도시가스 사업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음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농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16.9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· 국가, 지자체가 시행하는 비영리사업만 1/2감면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농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16.9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1/10 감면 적용</td>
<td>관련소개</td>
<td>농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16.9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- 18 -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05</td>
<td>◦ 전기·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납부기한 연장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 의무 미이행시 부과금 납부 &lt;br&gt; (고지 : 매년 6월30일, 납부 : 매년 7월20일) &lt;br&gt; - (개선)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납부기한을 고지는 매년 7월 30일, 납부는 매년 8월 31일로 연장</td>
<td>기업부담 완화</td>
<td>전기·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106</td>
<td>◦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각 시도 조례의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하가량, 사용량, 사용/허용량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 &lt;br&gt; - (개선)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용량 기준부과방식으로 제도 개선</td>
<td>하천수 사용료 민간부담 완화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07</td>
<td>◦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 허가수수료 폐지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 &lt;br&gt; - (개선) 허가수수료 폐지</td>
<td>국민부담 경감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08</td>
<td>◦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폐지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하천수 사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 &lt;br&gt; - (개선) 허가수수료 폐지</td>
<td>국민부담 경감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09</td>
<td>◦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수수료 폐지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를 징수 &lt;br&gt; - (개선) 허가수수료 폐지</td>
<td>국민부담 경감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10</td>
<td>◦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폐지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 &lt;br&gt; - (개선) 허가수수료 폐지</td>
<td>국민부담 경감</td>
<td>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111</td>
<td>◦ 공유재산 대부료·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(항구) &lt;br&gt; - (현행) 연 2~6%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&lt;br&gt; - (개선) 시중은행 1년단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(COFIX)를 적용 &lt;br&gt; ※ 현 최고 4% → 1.66%(COFIX) 인하 효과</td>
<td>분할납부 이자율 시중고금리와 연동시켜 기업 등의 부담 완화</td>
<td></td>
<td>행자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12  | ○ 회원조합 간 예금금 보험료 이중 부과 방지(항구)  
       - (현행)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금에처 지급사고에 대비, 예금액 일부를 상호 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이 예금의 여유분을 다른 수산업협동조합에 예탁 운영하는 경우도 보험료를 납부 하여, 보험료 이중 부과  
       - (개선)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다른 수산업협동 조합으로 예금을 예탁할 경우 또한 완화할 수 있음을 기대함 | 예수조합의 경영부담 경감 및 수지 개선 | 수산업협동조합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(165일) | 해수부 |
| 113  | ○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대금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인하(항구)  
       - (현행) 사업자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시, 소비자에게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2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 지급  
       - (개선)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100분의 15로 인하 (시중이자 연체이자율 수준) |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(16.9월) | 공정위 |
| 114  | ○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 대금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 인하(항구)  
       - (현행)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 철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시, 소비자에게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2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 지급  
       - (개선)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인하 (시중이자 연체이자율 수준) |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경감되고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 | 방문판매법 시행령 (16.9월) | 공정위 |
| 115  | ○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방법 개선(항구)  
       - (현행) 신·기본은 1년 단위로 보증료를 납부하나,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동안 보증료 일시 납부  
       - (개선) 일시 납부 → 1년 단위 분할납부로 전환 하고 카드 등 보증료 납부방법을 선택 가능 | 보증료 일시납에 따른 부담 완화로 보증료 납부방법을 단기 증약 1만여개사 활용예상 |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방법 개선(항구) | 중기청 |
| 116  | ○ 외국인 체류허가 온라인 수수료 감경(항구)  
       - (현행) 온라인에 의한 외국인 체류허가(체류 기간 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) 신청 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 
       - (개선)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| 출입국관리사무소 방출판필시 납부방법 감경 후, 민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|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| 법무부 |
| 117  | ○ 범죄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(항구)  
       - (현행) 범죄죄 및 교통법규 위반 범죄금은 현금 납부 원칙  
       - (개선)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 납부 허용 | 국민편의 증대 | 범죄죄처벌법 시행령, 도로교통법 시행령 (16.7월) | 경찰청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18  | 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기준 확대(형구)  
- (현행) 대금 적복의 효과가 있는 ‘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’을 통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대금지급 보증의무 부담  
- (개선)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| 기업의 경제적 ·금융 부담 완화 | 하도급법 시행령 (‘16. 10월) | 공정위 |
| 119  | ◦ 전자수입것너 환매청구기한 규정 삭제(형구)  
- (현행) 전자수입것너 구매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것너를 현금화하는 환매청구기한을 구입일로부터 30일로 설정  
- (개선) 환매청구기한을 삭제하여 구매자가 언제든지 환매청구 가능 | 환매가능기간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| 수입것너법 시행령 (‘16.6월) | 기재부 |
| 120  | ◦ 의약외품(염모제·치약제 등)에 대한 분리 허가 허용(한시)  
- (현행) 의약외품 팩키지 품목(제품명을 달리하는 동일한 품목)인 경우 1개의 품목허가 신고증으로 관리  
- (개선) 염모제와 치약제는 ‘팩키지 품목’을 제품명별로 품목 허가 신고 2년간 허용 | 의약외품 품목(변경) 허가 신고사항 시민권익의 향상 |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신고, 심사 규정 (‘16.6월) | 식약처 |
| 121  | ◦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의 건강기능 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(한시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 
- (개선)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(편의점 등)는 영업신고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|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영업부담 완화 |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 관련 법률 (‘16.9월) | 식약처 |
| 122  | ◦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 완화(한시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‘판매사례품 및 경품’ 제공 금지  
- (개선) 사형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‘판매 사례품 및 경품’ 제공 2년 한시 허용 |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영업활동 기회 확보 |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관련 규정 (‘16.5월) | 식약처 |
| 123  | ◦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(한시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위탁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제품에 모두 표시(전부, 일부 위탁 포함)  
- (개선) 일부 위탁한 경우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표시생략 가능 | 위탁 제조업체의 표시사항 기재 부담 및 영업비용 절감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‘16.6월) | 식약처 |

---
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24  | ◦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 완화(한시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‘판매사례품 및 경품’ 제공 금지  
- (개선) 사형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‘판매 사례품 및 경품’ 제공 2년 한시 허용 |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영업부담 완화 |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 관련 법률 (‘16.9월) | 식약처 |
| 125  | ◦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(한시)  
- (현행)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시 위탁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제품에 모두 표시(전부, 일부 위탁 포함)  
- (개선) 일부 위탁한 경우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표시생략 가능 | 위탁 제조업체의 표시사항 기재 부담 및 영업비용 절감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‘16.6월) | 식약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24  | ○ 해외분야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P, Program Provider)에 대한 국내물 편성규제 한시적 완화(한시)  
- (현행)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40%이상 편성 의무  
- (개선) 해외제작물은 구매 편성하는 외국문화 전문PP에 대해 국내물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(40%→30%) | 중소 방송사의 편성자율화 및 양업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한 고시 (16.6월) | 방통위   |
| 125  | ○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율 완화(한시)  
- (현행) 공동체라디오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20%이상 의무적으로 편성  
- (개선) 의무편성비율 적용을 2년간 중단 |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과 효율성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송법 시행령 (16.6월) | 방통위   |
| 126  | ○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(한시)  
- (현행)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다른 방송국(5년)과 다르게 3년으로 규정  
- (개선)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완화 | 방송사업자간 규제 혼란성 해소 및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파법 시행령 (16.6월) | 방통위   |
| 127  | ○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수납 허용(항구)  
- (현행) 금융투자회사(증권사 등) 국고금 수납불가  
- (개선) 「지방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도 국세 수납 허용  
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도 국세 수납 허용 | 신규 사업 마케팅 및 상품 개발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기재부   |
| 128  | ○ 금융투자회사의 지방세 수납 허용(항구)  
- (현행) 금융투자회사(증권사) 지방세 수납 불가  
- (개선) 금융투자회사 지방세 수납 가능 | 신규 마케팅 및 이용객 편의 증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재정법 시행령 (16.6월) | 행자부   |
| 129  | ○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(항구)  
- (현행) 국내 TV홍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음  
- (개선)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홍쇼핑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| TV홍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자동차 판매 관련 관리 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업 감독규정 (16.6월) | 금융위   |
| 130  | ○ 사업용자동차의 차량제한 규제 개선(항구)  
- (현행) 모든 지역에 사업용자동차(특시) 차량은 일률적으로 적용  
- (개선)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| 담배판매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  |
| 131  | ○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해지(항구)  
- (현행) 전통주 제조자의 1인 1일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00병 이하로 제한  
- (개선) 판매수량 제한 규정 폐지 |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구매자 편익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규제제고 (16.6월) | 국세청  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32</td>
<td>◦ 외인 태배 허용(항구)</td>
<td>주류 구매고객 편의 증대</td>
<td>주류의 양도⋅양수방법, 상량방 및 기타에 관한명령위임고시(16.6월)</td>
<td>국제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백화점 등에서 대면 구매 주류 태배 금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판매장을 방문하여 대면 구매한 자의 요청에 의한 외인 태배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3</td>
<td>◦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완화(항구)</td>
<td>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구매자 편익 제고</td>
<td>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(16.6월)</td>
<td>국제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우체국 소장문, 조달청 나라장터 등 7개 사이트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Kmail24(무역협회), 공영홈쇼핑 인터넷 (중기청)까지 확대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4</td>
<td>◦ 의약외품 염모계 용법-용량 자율성 확대(항구)</td>
<td>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</td>
<td>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·신사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의약외품 ‘2개형 산화형염모계’는 하나의 제1제외 하나의 제2제만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용법-용량 이외의 모든 사항이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두 가지의 제1제를 먼저 삽입 후 하나의 제2제를 혼합 사용하는 것도 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5</td>
<td>◦ 화장품 색소 관리 자율화(항구)</td>
<td>불필요한 검사비용 절감 및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</td>
<td>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실험방법 (고시)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, 사용가능한 원료 및 규격을 “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실험방법”에 따라 관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6</td>
<td>◦ ‘포장물’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목록 제품 생산자의 보존 및 유통비용 절감</td>
<td>식품의 기준 및 규격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목록은 냉장하거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환상하거나 보존하여야 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밀봉 포장한 두부, 진두부, 목록은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을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7</td>
<td>◦ 의약외품 의용제 첨가제 사용 범위 확대(항구)</td>
<td>심사 자료 준비비용 절감</td>
<td>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·신사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의약외품 허가 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외품 의용제의 경우도 안전성유의성 심사 실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염모제와 탈모방지제에 사용하는 첨가제 중 화장품원료제(ICID) 등에 등재된 성분이 문제가 없으면 안전성유의성 심사 면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38</td>
<td>◦ 가공식품 표시사항 특례 범위 확대(가맹점→가맹점+직영점)(항구)</td>
<td>직영매장 납품 표기사항에 환료로 양업활동 부담 경감</td>
<td>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가맹점의 경우, 가공식품에 대한 표기 사항을 완화하여 표시 가능하나, 직영매장은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직영매장 납품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,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간단 표시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범위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39</td>
<td>◦ 외용 의약외품 청정가 분량 기제법별 개선(항구)</td>
<td>의약외품 재조정 후의 비용 및 업무부담 완화</td>
<td>의약외품 좌목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크릴제, 연고제, 로션제 표시기재 시 공정시에 있는 청정가에 대해서만 분량을 '일정 범위'로 기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제재의 점도가 낮(항)를 조정하기 위해 청정가 투입량 변동이 있는 것으로 분량을 '일정 범위'로 기재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0</td>
<td>◦ 식별표시가 어려운 경제 의약품에 식별표시 의무 면제(항구)</td>
<td>제조업체의 영업활동 비용 및 업무부담 완화</td>
<td>의약품 표시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경제를 포함한 내용고형제에는 식별표시를 하거나, 품목별로 식별표시 면제를 인정 받아야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의약품에 문자, 도안 등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정이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'점도'는 식별표시대상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1</td>
<td>◦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 일반화(항구)</td>
<td>위해도가 낮은 의료 기기 취급 업체의 관리비용 감소</td>
<td>의료기기법 시행규칙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입대하는 자는 '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'을 준수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체온계, 자동 전자 혈압계 등은 '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' 적용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2</td>
<td>◦ 제외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색상 사용 허용(항구)</td>
<td>제외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소요시간 및 비용 감소</td>
<td>혈액관리법 시행령</td>
<td>복지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폐혈색상 사용 가능 경우 : 예방접종약의 원료, 의약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,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폐혈색상 사용 가능한 경우에 &quot;제외전단용 의료기기(시약) 임상시험&quot; 추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3</td>
<td>◦ 경품 규제 폐지(항구)</td>
<td>기업의 마케팅 및 소비촉진</td>
<td>경품류 제과 및 관련 공정규제 시행령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단일 경품이 2,000만 원 초과하거나, 경품 총액이 상품·용역 예상매출액의 3%를 초과하는 소비자 허가 경품 제공 금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소비자 허가 경품에 대한 규제 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4</td>
<td>◦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의무 flattening에 대한 규제 합리화(항구)</td>
<td>사업자의 가격 정책 자율성 및 법적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</td>
<td>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최저재판매가격 유지의무는 무조건 금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제적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5</td>
<td>◦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본사 현금결제 강제 완화 (항구)</td>
<td>가맹점주의 대금결제 방식 다양화로 영업활동 부담 감감</td>
<td>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많은 가맹분들이 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대금을 현금 결제할 것을 요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자가 원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거부 불가 조항 신설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46</td>
<td>◦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은린사업자 혁약 예규 폐지(항구)</td>
<td>중복규제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해소</td>
<td>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은린사업자의 약관예규를 준수 기준</td>
<td>(16.6월) 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은린사업자는 ‘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대한 별도 예규가 공정위에 존재해 중복규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‘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은린사업자의 약관예규법 준수 기준’ (공정위 예규)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7</td>
<td>◦ 지상파DMB 외주제작물 의무 편성비율 폐지(항구)</td>
<td>재정적으로 열악한 음향과 DMB 사업자의 기업부담 완화</td>
<td>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</td>
<td>방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임의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, 지상파DMB사업자의 경우 현재 적용규정으로 편성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지상파DMB사업자에 대한 의무편성비율 규제 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8</td>
<td>◦ 추심이체 출금목록의 방식 다양화(항구)</td>
<td>다양한 판매채널 기술 발전 기대</td>
<td>전자금융 감독규정</td>
<td>금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추심이체 출금목록의 방식을 서면, 녹취, ARS, 공인전자서명,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것으로 한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공인전자서명의 전자문서도 임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심이체 출금 등의 방식으로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9</td>
<td>◦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시 증자요건 완화(항구)</td>
<td>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촉진 기대</td>
<td>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</td>
<td>금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시 최소자본금의 100%를 증자할 필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자금규모 1조원 이상의 업무실적 1개년 지속이 가능한 저축은행의 영업규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소자본금의 50%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50</td>
<td>◦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(항구)</td>
<td>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기능 활성화</td>
<td>상호금융업 감독규정</td>
<td>금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소액화하기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상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• 자금규모 5억원→7억원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• 자기자본금의 최고한도 : 30억원→50억원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51</td>
<td>◦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비율 및 산정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대 기대</td>
<td>상호금융업 감독규정</td>
<td>금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예탁금·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(80% 이상)은 통합 업무에 비해 엄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예탁금·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비율을 단계적으로 100%까지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52</td>
<td>◦ 증권사의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허용(항구)</td>
<td>증권사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촉진 기대</td>
<td>금융투자업 규정</td>
<td>금융위 (16.6월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은행 등은 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판매대행 업무를 행정업무로 수행하나, 증권사는 경영업무 범위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증권사 경영업무에 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판매대행 업무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53  | 공장내 제품전시 판매장에 비치 가능한 제품의 범위 확대(항구)  
- (현행) 공장 부대시설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, 판매가능  
- (개선) 해당공장 생산품이 부품으로 들어간 타사의 완제품 전시도 허용 | 부대시설을 통한 마케팅 효과 증대 |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산업부 |
| 154  | 페로니겔슬래그 재활용 방안 확대(항구)  
- (현행) 페로니겔슬래그의 일종인 페로니겔슬래그는 시멘트 원료, 불제 등 법정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  
* 페로니겔슬래그에서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를 분리·제거하여 상품화 기술 개발했으나 활용 제약  
- (개선) 재활용 용도에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 항목 추가 | 신기술을 활용한 페로니겔슬래그 재활용 확대, 1500억원 투자 예정 | 산업부 | 환경부 |
| 155  | 최유급속 향유 폐촉매의 보관기간 연장(항구)  
- (현행)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최유급속을 함유한 폐촉매를 60일 이내에 적정처리 해야함  
- (개선) 보관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|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폐촉매 수입 비용 절감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| 156  | 전문대학원 '전일제 주간과정 중심 운영' 배지(항구)  
- (현행) 전문대학원 전체 수업 중 2/3 이상을 평일 주간(19시 이전)에 운영해야함  
- (개선) 특성에 따라 주간/아간/주말 수업 자율 운영 | 학교여건, 특성, 학생상황, 산업 수요에 탄력 대응 |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(교육부 지침) (16.9월) | 교육부 |
| 157  |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완화(항구)  
- 중소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완화  
* 중합인증 우선업체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: 관세청장이 법규준수, 내부통제시스템, 재무건전성,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, 공인한 우선업체  
* (현행) 중합인증 우선업체 신사시 중소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부채비율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
* 모든 수출업체 : 동종업종(대기업+중소기업) 평균 부채비율의 200%이하 적용  
- (개선) 중소 수출기업에 적용요건을 완화  
* 중소 수출기업 : 동종업종(중소기업) 평균 부채비율의 200%이하 적용 | AEO 공인 획득 중소기업 증가 | AEO 공인 획득 중소기업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(관세청) (16.8월) | 관세청 |
| 158  | 중견기업 인정요건 완화(항구)  
- (현행)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3년간 중소기업 인정  
- (개선)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포기 하려는 기업을 졸업유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심사제도 도입 |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불편 해소 |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(16.6월) | 중기청 |
 순번 | 과제명/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개정 법령(개정시기) | 소관부처
--- | --- | --- | --- | ---
159 | ○ 방산물자 A5비용의 방산원가 포함(항구) - (현행) 방산물자는 품질보증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설정하고, 납품이후 발생하는 품질보증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- (개선) 품질보증기간을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계약업무의 일관성 유지 | 방산산업체 비용 부담 완화 및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계약업무의 일관성 유지 | 방위사업 관리규정 ('16.6월) | 방위사업청
160 | ○ 착중도금으로 구입한 자재의 수출용 우선 사 용허가(항구) - (현행) 착중도금을 재원으로 구입한 공용 부품은 제정비에 전용하여 사용 불가 - (개선) 지금된 착중도금을 정부에 반환 후 해당 자재를 수출용 장비에 사용 가능 |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 | 방위산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제정 ('16.6월) | 방위사업청

### 2-2 투자-실패투자

| 순번 | 과제명/개선내용 | 기대효과 | 개정 법령(개정시기) | 소관부처
--- | --- | --- | --- | ---
161 | ○ 펀드 등을 통한 재간접투자 활성화(항구) - (현행)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경우 자금 조달방법이 제한 - (개선) 연기금 등의 재간접투자인 경우도 직접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모, 주식소유제한 완화 적용 | 재간접투자 기구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국민에 안전한 투자처 제공 | 재간접투자 기구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국민에 안전한 투자처 제공 |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('16.6월) | 국토부
162 | ○ 보험업법상 대주주 범위에서 계열분리사 제외 (항구) - (현행)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사로 대주주 범위와 동일하게 투자할 수 없고 제한이 발생 - (개선)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집단에서 제외되는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제외 | 계열분리사의 거래시 투자한도 확대 및 제한적용이행 의무 완화 | 보험업법 시행령 ('16.7월) | 금융위
163 | ○ 특허담보대출 지원기업 벤처기업확대(항구) - (현행) 특허담보대출은 벤처기업확대 지급금 대금사업자 재무제한이 없어 기업의 벤처기업추진에 제한이 없음 - (개선) 특허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만으로 벤처기업확대 기회 부여 | 연간 약 50여개 이상의 특허 담보대출 이용가능 | 벤처기업확대 요령(고시) ('16.6월) | 중기청
164 | ○ 기술지주회사 차지자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(항구) - (현행) 창업투자회사는 특수관계인(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)에 대한 투자를 금지 - (개선)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 |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|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('16.6월) | 중기청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65  |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확대(항구)  
- (현행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 범위는 신규 주식 인수, 신규 발행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으로 한정  
- (개선)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에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교환사채 추가 |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 확대  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중기청 |
| 166  | 축산물가공업자 사료제조 허용(한시)  
- (현행) 축산물가공업자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사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'사료관리법'에 따른 별도 시설을 설치 필요  
- (개선) '사료관리법'에 따른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축산물가공시설에 한하여 '사료제조업' 등록시 별도 시설 생략이 가능(2년) | 시설중복투자부담 완화 | 사료관리법 (16.9월) |
| 167  | 먹는샘물 공장의 착향탄산수 제조 허용(항구)  
- (현행) 기존 먹는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만 제조가 가능하나, 착향탄산수는 불허  
- (개선) 탄산수에 착향 첨가를 허용하여 착향탄산수도 제조 허용 | 먹는샘 수산업체의 설비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| 먹는샘 관리법 시행령 ('16.12월) |
| 168  | 자동차 실외후사경 장착관련 규제개선(항구)  
- (현행) 현행 규정상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는 '미러리스 시스템' 도입 불가  
- (개선)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사이드미러 대체 카메라를 허용하도록 안전기준 개정 | 자동차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부품 산업 활성화 | 국토부 |
| 169  | 지상서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선(항구)  
- (현행) 지상서비스 표준모델의 기준항목에 추진 장치를 'CNG, 충전식 전기차', '디젤'으로 제한  
- (개선) 표준모델의 기준항목에 추진장치 항목 삭제 | 다양한 유형의 지상서비스 모델 공급 가능 | 지상서비스의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(16.6월) |
| 170  | 신고 대상 무선국 확대(항구)  
- (현행) 이동국, 육상이동국, 휴대용 무선통신기 신고·개설은 육상국, 기지국,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경우만 가능  
- (개선) 적합성평가를 받은 휴대용 무선통신기는 육상국,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'신고·개설 가능 무선국'에 포함 | 이동국·육상이동국용 휴대용 무선통신기시설의 규제부담 완화 | 미래부 |

- 28 -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71  | ◦ 곤충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보관시설 기준 완화(양구)  
- (현행) 폐기물 재활용업은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함  
- (개선) 폐기물처리업자 중 곤충(동체 등)을 사육하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| 동해동에 분반도 생산시설 설치·운영자의 사업 초기비용절감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| 172  | ◦ 개선은 곤충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보관시설 기준 완화(항구)  
- (현행)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차량을 고정 등록하고 공동 사용은 금지  
- (개선) 동일법인인 여러 사업장이 동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수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사용 허용 | 폐기물 재활용업소의 차량중복 구입 및 운용으로 인한 부담완화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| 173  | ◦ 유치원 폐기물 위탁처리 규제 완화(항구)  
- (현행) 1일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유치원은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포함되어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대상  
- (개선) 유치원의 경우 급식인원 기준을 100명→200명 이상으로 완화 | 급식인원 20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자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절감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
3-1 인력 (고용 및 교육)
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74  | ◦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(항구)  
- (현행)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별도로 제조 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, 1인 기업에 한해 제조 판매관리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
- (개선) 제조 판매업자와 제조 판매관리자 겸직이 가능한 경우를 1인 이상의 기업까지로 확대 | 중소기업의 의무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 | 화장품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175  | ◦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제조관리자 규제 완화(한시)  
- (현행)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약사를 제조관리자 의무 고용  
- (개선) 식품 제조·가공업체에서 의약품 청가제인 "백당"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4년제 이상의 이공계학과 졸업자로 2년간 확대 |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(연간 8.5억원) | 약사법 (16.9월) | 식약처 |
| 176  | ◦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(항구)  
- (현행) 유전자제조합의약품, 세포배양의약품 제조 업체는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  
- (개선)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, 의사,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*로 확대  
* 기술자 : 생화학, 미생물학, 생명공학, 수의학 전공자 등 | 영업자의 고용비용 경감 | 약사법 (16.9월) | 식약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77</td>
<td>외압품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의무 부담 완화(양구)</td>
<td>관련 기업의 고용부담 연간 10억원 감감</td>
<td>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조 업체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(약사)의무 고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소독제 제조업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78</td>
<td>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 폐질책임자 자격요건 확대(양구)</td>
<td>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폐질책임자 인력확보 용이</td>
<td>의료기기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의료기기 폐질책임자는 학력, 경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폐질책임자 자격요건(학력·경력) 확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79</td>
<td>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유예(한시)</td>
<td>중소규모 사업주 부담완화</td>
<td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(16.10월)</td>
<td>고용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자, 하수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'19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시)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: '18.1.1.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시)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: '19.1.1.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0</td>
<td>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(항구)</td>
<td>위험물시설 관계인의 대리자 고용부담 감소(주유소 13,000여개)</td>
<td>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으로 소방안전협의회의 위험물안전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1년 종사경력을 자격기준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1</td>
<td>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개선(항구)</td>
<td>수중형 연안체험활동 활성화로 관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</td>
<td>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당 1명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운영자 참가자 8명당 1명으로 개선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2</td>
<td>대형유통업체의 납품·입점 업체 종업원 파견 요건 완화(항구)</td>
<td>중소업체·입점 업체의 영업활동 촉진과 부담 완화</td>
<td>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 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(16.6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대형유통업체의 납품·입점하는 업체가 자원을 파견할 경우에 특수한 판매기법 능력을 지닌 1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하여 하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‘1년 이상 경력’ 요건을 삭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3</td>
<td>배출가스 배출가스사업의 동록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배출가스 배출가스사업의 동록요건의 완화(항구)</td>
<td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배출가스 배출가스사업의 동록요건의 완화(항구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전문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련없이 장비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도 인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84</td>
<td>○ 중상과무기류공기 촌기안 환경 특례제도 도입(항구)</td>
<td>중상과무기류공기 환경 촌기안 및 기업 부담 완화</td>
<td>국가유공자</td>
<td>보훈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 의무 부여</td>
<td></td>
<td>예우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▷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로 국, 공립학교 15%</td>
<td></td>
<td>보훈보상자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▷ 200인 이상(비제조업 20인 이상)업체로 업종별로 3~8%</td>
<td></td>
<td>5·18 민주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▷ 사립학교 10%</td>
<td></td>
<td>유공자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3급 이상 중상이자 고용 시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인원으로 산정</td>
<td></td>
<td>(169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5</td>
<td>○ 근로자 건강감정 재검기한 연장(항구)</td>
<td>사업주 및 근로자의 건강 감정 시행 부담이 완화</td>
<td>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(고시)</td>
<td>고용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사업주는 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재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조치</td>
<td></td>
<td>(166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건강감정 제검기관을 건강진단기관별의 재검기준과 동일하게 10일에서 30일로 연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6</td>
<td>○ 경계사,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유효(한시)</td>
<td>도매시장 종사자의 경계 시험 부담 완화 및</td>
<td>농수산물 유통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도매시장의경영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, 경계사, 중도매인으로 선규 임용·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</td>
<td>도매시장 활성화</td>
<td>및 가격 안정에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경계사, 중도매인 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(2년)</td>
<td></td>
<td>관련 법률 시행규칙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7</td>
<td>○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완화(한시)</td>
<td>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자(매년2조여명)의 개업 및 취업기간의 단축</td>
<td>공인노무사법 시행령</td>
<td>고용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공인노무사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현장 연수교육을 받아야 개업 가능</td>
<td></td>
<td>(166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연수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단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8</td>
<td>○ 공인노무사 지정교육기관 강의실 기준완화(항구)</td>
<td>교육능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가능</td>
<td>공인노무사법 시행령</td>
<td>고용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어야 공인노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</td>
<td></td>
<td>(166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강의실 수용 인원 기준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89</td>
<td>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의무 완화(항구)</td>
<td>기업 부담 완화</td>
<td>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유해화학물질 취급 당당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배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 필요</td>
<td></td>
<td>(166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담당자 및 일선관계의 경우 교육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90</td>
<td>○ 환경전문공사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택지(항구)</td>
<td>기업 및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</td>
<td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환경전문공사종사 기술인력은 최초 고용된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의무화</td>
<td></td>
<td>(166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환경전문공사업체 교육 의무 택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91  | 실내공기질 법정교육 면제(항구)  
- (현행)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 법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
- (개선)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한 자,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은 법정교육 면제  | 교육비용 절감  |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(16.12월)  | 환경부 |
| 192  | 장례지도사 현장실습기관 제한 기준 완화(항구)  
- (현행) 특·광역시 장례식장 현장실습 기관 기준 : 원광군 시신안치 건수 20건 이상 장례식장  
- (개선) 원광군 시신안치건수 10건 내의 장례식장으로 기준 완화(시·군·구의 동일한 기준)  | 특·광역시의 장례지도사 현장실습기관 현황확인  |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지침 변경 (16.6월)  | 복지부 |
| 193  | 안전관리자 교육 편의 증진(항구)  
- (현행)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집합으로만 실시  
- (개선)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도록 실시간과 관련  | 안전관리자 저의서 제고  |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 | 안전처 |
| 194  |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 교육 기준 개선(항구)  
- (현행) 교육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을 횡설적으로 규정  
- (개선) 안전교육 대상자가 인명구조 저격증 소유자임을 고려,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(6시간 → 3시간) 조정  |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담 완화, 안전교육 효과 제고  |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(16.6월)  | 안전처 |
| 195  |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(항구)  
- (현행) 지정기준으로 교육장 시설을 요구하여 임차시설 활용 불가능  
- (개선) 지정기준 중 시설규모 확보를 삭제하여 각 지역의 임차시설을 활용 가능  | 안전관리지원기관 교육장소의 실효적 운영과 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접근성에 따른 만족도 향상  |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 | 안전처 |
| 196  | 식품위생교육 방식 다양화(항구)  
- (현행) 식품영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1회 (3시간) 의무 부여  
- (개선) 식품위생법 상 우수·모범업소로 지정 받을 경우 2년간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, HACCP인증 업체는 교육을 항구적으로 면제  | 식품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 완화  | 식품위생법 (16.9월)  | 식약처 |
| 197  | 식품위생교육 필수 기준 개선(항구)  
- (현행) 기존 식품영업자가 입증을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가능  
- (개선) 입증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으로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간출  
* 연초에 입증을 전환하는 경우 교육 미수로 입증 전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 개선  | 영업활동 기회 보장 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(16.6월)  | 식약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/개정시기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98  | ◦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 확대(당구)  
       - (현행) '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'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 종사 경력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나, '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'은 면제 대상 제외  
       - (개선)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|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부담 해소 | 경비업법 시행령 (16.6월) | 경찰청 |
| 200  | ◦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시행 유예기간 연장(한시)  
       - (현행)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이 '17.1.1일자로 시행  
       - (개선) 시행일을 '18.1.1일자로 1년 유예 |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 현장 적용 및 영업자 부담 완화 |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201  | ◦ 수입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(GMO)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(한시)  
       - (현행) GMO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표시기준이 '17.2.4일자로 시행  
       - (개선) 표시기준 적용시점을 6개월 추가 연장 |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준비기간 부여 |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(16.11월) | 식약처 |
| 202  | ◦ 소형 리튬이차전지 안전확인 대상 한시유예(한시)  
       - (현행)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후 통관 및 출고가 가능  
       - (개선) 에너지 밀도 400Wh/L 미만의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안전 확인 대상 적용을 8개월 유예 (‘16년말) | 기업 인증비용 절감 | 전기용품안전 관리운용요령 (16.5월) | 산업부 |
| 203  | ◦ 사업장내 실험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(한시)  
       - (현행) 실험, 연구목적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내 실험실에 대해서도 "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"에 해당  
       - (개선) 제조·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연구용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 가능 | 연구개발 촉진 및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해소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16.6월) | 환경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204  | ◦ 매전기·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량 감경(항구)  
  - (현행) 매전기·폐전자제품을 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에 기여하는 자 인센티브 부채  
  - (개선) 매전기·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재활용 의무량 감경 | 기업 부담 완화 | 전기·전자제품 자동차의 차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 | 환경부 |
| 205  | ◦ 가연성가스의 건축물 내 보관 허용(항구)  
  - (현행) 가연성가스는 건축물 내 보관이 불가하여 현재 저장이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  
  - (개선) 실린더디비넷에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건축물 내 보관 허용 | 사업자 부담 완화 |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산업부 |
| 206  | ◦ 고압가스 저장기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케비넷 1개라도 신설, 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 되면 저장소 변경 허가 절차 필요  
  - (개선)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변경허가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 | 반도체 사업자 매출 손실 감소 및 인허가 비용과 기간 감축 |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산업부 |
| 207  | ◦ 안전점검원 선임 시 배관검사 기준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타나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간 거리가 3m 미만인 경우 버 달하의 배관으로 인정  
  - (개선) 배관 간 거리(3m) 기준 삭제 | 도시가스사의 안전점검원 인력 운영비용 절감 |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(16.6월) | 산업부 |
| 208  | ◦ 사업장 통로의 장애물 설치 기준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사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 내 통로설치 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 장애물 설치 불가  
  - (개선)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m이내 장애물시설 설치 가능 | 사업장의 작업효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|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16.6월) | 고용부 |
| 209  | ◦ 창고 등의 소방정보시설 설치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등까지 소방 정보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을 폭넓게 규정  
  - (개선) 화재 위험성이 적은 일정기준(사람 비거주, 모래·석재 등 붐연재료 보관장고 등)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경보시설 의무설치 대상 제외 |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총 15만개소 중 4만개소가 해택 수혜 가능  
  • 비상경보발신기 1개당 100만원 소요 | 소방시설법 시행령 (16.6월) | 안전처 |
| 210  | ◦ 주유취급소 내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술 기준 합리화(항구)  
  - (현행) 주유취급소 내 전기차충전기 및 전력 분배·차단 장치는 발폭성등 구비 의무  
  - (개선) 충전기기 등과 주유설비 간 일정 거리 유지 시 발폭 상등 구비 의무 면제 | 전기차충전기 보급의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사업 및 부면사업 활성화 |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안전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11</td>
<td>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 기술기준 합리화(향후)</td>
<td>화학실험실 설치의 건축비용 감소 및 운용 편의 제고</td>
<td>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대학교 등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사업장 기술기준 적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일반취급소의 특례(완화기준)로 마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12</td>
<td>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용되는 국제기준 범위 확대(향후)</td>
<td>국제협공업무협력과 국제해상위험물 규제 형평성 제고, 국제협공물류의 판의 제공</td>
<td>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국제해상위험물과 달리, 항공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상 운반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없음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국제항공위험물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13</td>
<td>정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술기준 합리화(향후)</td>
<td>정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의 비용감소 및 설계프로그램 변경 비용 감소</td>
<td>위험물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이 스케줄 80으로 규정, 소화약제의 상한 규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일반인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는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을 스케줄 40으로 완화하고 소화약제의 상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14</td>
<td>건설현장 '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' 규제개선(향후)</td>
<td>소화기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부담 완화</td>
<td>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(NFSC 606) ('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*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응접 등 작업방범 5m 이내에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(연면적 3천㎡ 이상 등), 비상경보 등 설치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간이소화장치 설치 반경 확대(5m 간격 →25m 간격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3-3 행정부담
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15</td>
<td>협정판례 사후작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완화(한시)</td>
<td>기업형행정조비용 절감</td>
<td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16.10월)</td>
<td>관세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판례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정판례 적용신청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협정판례 사후작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제출로 2년간 한시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16</td>
<td>연구시험용 자동차 부품 판매감면 신고서 절차 서류의 전자제출 부분 허용(한시)</td>
<td>기업형행정조비용 절감</td>
<td>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16.9월)</td>
<td>관세청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현행) 판세감면 수입신고건에 대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(한시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(개선) 연구시험용 자동차 부품감면 대상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부분 허용(한시 1년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17</td>
<td>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변경신고 의무 유예(한시)</td>
<td>국내지사가 신고한 내용(업무범위 등) 신속 변경 가능</td>
<td>외국환 거래규정(16.9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18</td>
<td>판세사회 총회 관련 의무 면제(한시)</td>
<td>판세사회 업무부담 경감</td>
<td>판세사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19</td>
<td>세무사회 총회 관련 의무 면제(한시)</td>
<td>세무사회 업무부담 경감</td>
<td>세무사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20</td>
<td>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(한시)</td>
<td>건설기계 수출업자 행정부담 완화</td>
<td>건설기계 관련법(16.12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221</td>
<td>시추조사장비의 한시적 건설기계 등록(한시)</td>
<td>오래된 시추조사장비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및 불편 해소</td>
<td>건설기계 관련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222</td>
<td>세무사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 해지(한국)</td>
<td>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에 따른 부담 완화</td>
<td>세무사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23</td>
<td>세무사회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 해지(한국)</td>
<td>세무사회 자율성 보장</td>
<td>세무사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24</td>
<td>금융기관의 중복보고 의무 해지(한국)</td>
<td>이중보고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</td>
<td>자본시장법 시행령(16.6월)</td>
<td>금융위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25</td>
<td>○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보고 폐지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전산·법무·회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위탁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&lt;br&gt; - (개선)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금감원에 보고하는 절차 삭제</td>
<td>금융지주회사의 업무절차 효율화</td>
<td>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(16.6월)</td>
<td>금융위</td>
</tr>
<tr>
<td>226</td>
<td>○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서류 인증범위 확대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서류 자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 &lt;br&gt; - (개선)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서류도 가입 증명 서류로 인정</td>
<td>통신판매업자의 신고토록 제고로 영업부담 감소</td>
<td>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(16.9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227</td>
<td>○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완화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(금융 보험사 제외)는 소유자배구조, 재무구조 변동현황, 경영활동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 &lt;br&gt; - (개선)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계열 회사 주식보유 변동내용 삭제</td>
<td>대기업집단 소속 1,488개 비상장사의 공시부담 완화</td>
<td>공정거래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228</td>
<td>○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보절차 개선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 변경 등록시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의무 및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존재 &lt;br&gt; - (개선)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 및 제공의무 삭제</td>
<td>가맹본부의 업무부담 경감</td>
<td>가맹사업법 시행령 (16.9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229</td>
<td>○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대한 제조 자료의무 완화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조세제납처분, 과태료 처분 등을 받거나, 벌의사실이나 법 위반사실이 발생 시 통지 의무 부여 &lt;br&gt; - (개선)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불필요한 통지 의무 삭제</td>
<td>기업의 자료제출 불편 해소</td>
<td>월드클래스 300 운영요령 (고시) (16.6월)</td>
<td>중기청</td>
</tr>
<tr>
<td>230</td>
<td>○ 기술사사무소 장부비용의무 폐지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기술사사무소는 기술사 직무수행일지, 직무보고자 명부, 설계·보고서 수급대장, 공사 감리 기록대장 등 관련 장부 비치 의무 &lt;br&gt; - (개선) 기술사사무소 장부비치의무 폐지</td>
<td>기술사사무소 장부관리업무 수행 인건비 절감</td>
<td>기술사법 시행규칙 (16. 6월)</td>
<td>미래부</td>
</tr>
<tr>
<td>231</td>
<td>○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등록 규제완화 (항구)  &lt;br&gt; - (현행) 지하수계발·이용시설공업, 지하수정화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모두 변경신고 대상 &lt;br&gt; - (개선) 변경등록사항 중 임원 변경내용을 삭제</td>
<td>사업자 판익 증대</td>
<td>지하수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국토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232  | ◦ 건설기계 동록서류 확대(항구)  
  - (현행) 건설기계 동록 시 건설기계 수입 사물을 증명하는 수입면허 또는 제작 사물 증명하는 건설기계 제작증 분실 시 건설기계 동록 불가  
  - (개선) 서류 분실 시 발행 사물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| 건설기계를 동록하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|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
  (16.6월) | 국토부 |
| 233  | ◦ 지리적 표시 동록서류 제출부담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지리적 표시 동록과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신청시 동일서류 동록 제출  
  - (개선) 동일한 서류는 어느 한쪽으로 제출된 경우 상호 인정 |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|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 
 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234  | ◦ 피해보전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(항구)  
  - (현행) 피해보전적불금 신청 시 생산환경정보 기업 폐업지원금 지급 요청시 작별별 전환 계획 제출  
  - (개선) 피해보전적불금 지급신청시 생산환경 상제 및 폐업지원금 지급 요청시 양식 간소화 | 제출서류 간소화로 농업인 편의 도모 |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
 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235  | ◦ 영세 비료생산자들을 위한 동록신청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비료생산 동록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재배상황서작,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  
  - (개선) 동록신청서류에 ‘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입증서류’와 ‘공장등록증명서’는 백 1하여 제출 |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|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
  (16.6월) | 농식품부 |
| 236  | ◦ 폐수재이용계획의 제출의무 대지(항구)  
  - (현행) 산업단지 입주자 중 1~3종 사업장 설치 분야(화폐, 폐수재료처리시설 이용자 제외) 및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의무적  
  으로 5년마다 폐수재이용계획 수립·행 | 기업 부담 경감 | 낙농장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  (16.6월) | 환경부 |
| 237  | ◦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효기간 연장(항구)  
  - (현행)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품질검사서를 제출해야함  
  - (개선)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의 유효기간을 수입·제조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 | 기업활동부담완화 | 기업의 경영처리 해소 | 환경부 |
| 238  | ◦ 기본과목 플랫폼 선정 시 제출서류 간소화(항구)  
  - (현행)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물질배출 풍산을 위하여 사업자는 매 반기가마다 지자체에 관련 자료 제출(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여지 등)  
  - (개선) 제출 자료 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·보존한 사항은 면제 | 기업의 행정처리 불편 해소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
  (16.6월) | 환경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 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39</td>
<td>◦ 의약외품 연차보고 대상 확대(항구)</td>
<td>의약외품 제조업체의 품목변경 비용 절감</td>
<td>의약외품 품목 혜가, 신고, 심사 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연차보고로 갈음하는 청가제의 공정성 감각 개선이 확립되고, 직접의 용기·포장 변경은 연차보고 대상에서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연차보고 대상 청가제의 공정성 감각 개선을 확대하고 직접의 용기·포장 변경도 연차보고 대상에 포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0</td>
<td>◦ 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계획 보고서 폐지(항구)</td>
<td>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업계 부담 경감</td>
<td>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(고시)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의약품제조업자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잘못적으로 수집하려는 경우도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자발적인 안전성 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 의무 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1</td>
<td>◦ 식품절약기에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(건강진단결과서) 삭제(항구)</td>
<td>영업 신고에 따른 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</td>
<td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영업을 하기·신고를 동반하는 자는 규정된 영업 시설을 갖추고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만 신고 가능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'건강진단결과서' 제출 생략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2</td>
<td>◦ 연구·시험용 X-ray 발생장치 수입규제 개선(항구)</td>
<td>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기간 단축</td>
<td>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(16.10월)</td>
<td>원안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X-ray 수입을 위해서는 판매허가와 설계승인이 필요하며, 설계승인 시 설계도면 제출 필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판매허가 처리기간(20일), 설계 부담금(170만원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연구·시험용으로 X-ray 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판매허가 면제, 설계도면 제출에 갈음하여 현장검사 시 안전성을 사후 점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3</td>
<td>◦ 뉴스통신사 외국 뉴스통신사 국내지사 등 설치 규제완화(항구)</td>
<td>기업활동부담완화</td>
<td>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문제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 설치 시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를 제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지국장 이력서 제출의무 조항 폐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44</td>
<td>◦ 용상해수양식어어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(항구)</td>
<td>재신청시 서류 제출 간소화로 양식어어업인의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 경감</td>
<td>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(16.6월)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용상해수양식어어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동기간 만료 시 신규 허가와 동일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필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재허가 신청시에는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 제기하나 일관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필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245  | ◦ 신원진술서 작성방법 개선(항구)  
- (현행) 신원조사 대상자가 작성·제출하는 신원 진술서에는 본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물 사진(반명함판) 증명사진 부착 의무화  
- (개선) 신원진술서 첨부 사진에 인화된 증명 사진(실물사진) 또는 이미지 파일 허용 | 년 30만건의 경찰신원조사 비용·시간 절감 | 경찰신원조사 처리규칙(경찰청 예규) (16.10월) | 경찰청 |
| 3-4 | 절차간소화 | | | |
| 246  | ◦ 아마추어무선국 허가·검사 간소화(항구)  
- (현행)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·검사체계가 일반 무선국과 같아 복잡  
- (개선)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허가신청 및 허가증 기재사항 축소하고 아마추어무선국의 검사생략 범위를 확대 | 국내 국내 아마추어 무선국 및 기술연구 활성화 | 전파법 시행령 (16. 6월) | 미래부 |
| 247  | ◦ 연구개발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입규제 개선(항구)  
- (현행) 방사선발생장치 수입하는 자는 판매허가 및 설계승인이, 사용하는 자는 사용허가 필요  
- (개선) R&D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시 판매 허가를 면제하고, 인허가 절차 단순화해 기간 단축 | 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|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(16.10월) | 원안위 |
| 248  | ◦ 형식증명서를 민원처리기간 단축(항구)  
- 외국에서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경우 제작사의 형식증명서를 제출해 기간 단축 | 영업활동 촉진 | 항공법 시행규칙 (16.6월) | 국토부 |
| 249  | ◦ 국제선 항공여객 운임 신고처리기간 단축 (항구)  
- (현행) 신고제 도입 전 항공사의 행정처리기간 7일  
- (개선) 5일로 단축 | 일정비용 절감 및 국내 항공시장의 성숙과 국제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| 항공법 시행규칙 (16.6월) | 국토부 |
| 250  | ◦ 농업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(항구)  
- (현행) 농업용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고 필요  
- (개선) 연장신고 없이 자동 연장 | 농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|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251  | ◦ LED 간접조명 활용 가로간판등 일부 신고 제외 (항구)  
- (현행) LED 활용 간접조명 광고물은 유해성이 낮음에도 신고하여 표시해야함  
- (개선) LED 등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간접 조명으로 사용되는 소규모, 저층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| 소규모 사업장자 등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|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(16.7월) | 행자부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 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252   | ◦ 육외광고물 표시기간 범죄 또는 연장(항구)  
- (현행)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 되어 정기적인 연장 신고를 해야 함  
- (개선) 육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또는 폐지 | 민원인 행정부담 감소 |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
(16.6월) | 행정부 |
| 253   | ◦ 평생교육시설의 타지역 이전시 배치신고 개선(항구)  
- (현행)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위치변경으로 관할 교육감(장)이 변경될 경우 폐쇄 후 신규 신고  
- (개선) 평생교육시설의 이전으로 관할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고만 하도록 개선 | 지역교육 여건 변화에 평생교육시설의 대응력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|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
(16.9월) | 교육부 |
| 254   | ◦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완화(항구)  
- (현행)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가 변경신고 대상  
- (개선) 신고용량 대비 30% 이상 증설하는 경우 예만 변경신고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| 사업자 불편 및 행정력 낭비 예방 |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 
(16.6월) | 환경부 |
| 255   | ◦ 배출가스저감장치 검사기간 연장 기한 개선(항구)  
- (현행)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기간 연장 기한은 ‘검사만료 후 30일 이내’로 규정  
- (개선) 검사기간 연장 기한을 ‘검사기간 만료후 40일 이내’로 10일 연장 |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제공 |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 확보,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
(16.6월) | 환경부 |
| 256   | ◦ 공회전 제한장치인증 변경신청 기한 개선(항구)  
- (현행)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·공급하는 자는 상호, 대표자, 주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
- (개선) 변경신청 기한을 ‘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’로 연장 | 사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| 공회전 제한 장치의 성능 기준·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
(16.6월) | 환경부 |
| 257   | ◦ 가계주부 정보공개서 동록절차 간소화(항구)  
- (현행) 가계주부가 공정위로 정보공개서를 동록 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불가  
- (개선) 정보공개서의 동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적 과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| 가계주부의 정보공개서 동록 및 변경등록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경감 | 가계사업법 시행령  
(16.9월) | 공정위 |
| 258   | ◦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 동록의무 완화(항구)  
- (현행) 동물실험시설 설치자(대학총장, 병원장 등)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 
- (개선)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 | 기업의 행정처리 비용 절감 |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(16.11월) | 식약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션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59</td>
<td>○ 원료의약품 동독협상 개선(항구) - (현행) 원료의약품 제조 수입자는 해당 성분의 명칭 및 제조소를 동시에 등록해야 함 - (개선) 원료의약품과 제조소 시설을 각각 등록 가능하게 하여 동일 제조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료 등록시 제조소에 대한 중복심사 면제</td>
<td>원료의약품 제조 수입자의 동독기간 단축(4주) * 심사기간 : 17주 (제조소 현장심사 시) → 13주</td>
<td>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260</td>
<td>○ 의약외품 허가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(항구) - '신물질 합유제제'에 대한 반복투여독성자료 → 면역독성 및 국소독성 자료로 대체 가능한 경우 면제 - '새로운 제형'에 대한 효능효과 임증자료 → 재제의 특성에 따라 면제 - '대한민국약전연구원(성약)규칙집'수재 성분에 대한 복합제 독성자료 → 독성자료 면제 가능</td>
<td>의약외품 심사 자료 이용 절감</td>
<td>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·심사 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261</td>
<td>○ 의료기기 제외가 후속조치 기간 차별화(항구) - (현행) 식약처청이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을 명하는 경우, 사안의 경·중과 관계 없이 업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허가변경 조치 의무 - (개선) 허가변경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토록 완화</td>
<td>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업체 부담 완화</td>
<td>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262</td>
<td>○ 자동차정착자가 직접 수입·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 신고 간소화(항구) - (현행) 자동차정착자는 매년 1회(131일) 장착타이어 수입·판매실적과 효율등급 보고서 종부 작성 - (개선) 수입·판매실적과 효율등급 보고서 양식을 통합하여 행정절차 간소화</td>
<td>행정절차 간소화</td>
<td>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 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·표시 등에 관한 규정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63</td>
<td>○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간 완화(항구) - (현행) 700MW 이상 발전소는 천연가스 수급 예정일 5년전에, 100~700MW 발전소는 3년전까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해야 함 - (개선)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간을 발전소 시설 용량 기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수급예정일로부터 5년전에 신청</td>
<td>발전사업자 부담 완화 및 발전 인프라 구축연간 개선</td>
<td>천연가스 공급 규정 (한국가스공사)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64</td>
<td>○ 고압시설 기술검토신청서 작성규격 완화 (항구) - (현행) 여러 곳의 허가지역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관리가 됐에도 허가지역 일부를 철거(폐지) 하는 경우 기술검토신청서를 작성 필요 - (개선) 허가받은 고압시설 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기술검토 대상에서 제외</td>
<td>사업자 기술검토 수수료(건당 평균 18만원) 및 처리기간(15일) 절감</td>
<td>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265  | ◦ 방송통신기자재 병행수입자 적합성평가 인증 간소화 (항구)  
  - (현행) 전과법상 인증필수 신청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업계 병행수입자가 사실상 제출 불가능한 자료 제출의무 존재  
  - (개선)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는 병행수입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|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병행수입 활성화 | 미래부 |   |
| 266  | ◦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검사 면제 (항구)  
  - (현행)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장이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게 해야 함  
  - (개선) 지도점검(오염도점검)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(2년)으로 그 해 또는 다른 해 자가 측정 면제 | 연간 자가측정 비용부담 18억원 완화 | 환경부 |   |
| 267  | ◦ 제조·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유예 (항구)  
  - (현행) 제조·수리공장의 지정 및 기간 경신 시 추가로 연1회 현장 조사하도록 규정  
  - (개선) 현장조사를 1년간 한시 유예 | 기업 생산현조 비용 절감 | 관세청 |   |
| 268  | ◦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점검 대상 확대 (항구)  
  - (현행) 비산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이 총 비산누출시설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10%범위까지 추가로 인정  
  - (개선) 난해시설의 제외 한계를 30%로 하되 환경청과 협의하여 10% 이상도 확대 가능 | 점검비용 및 시설개선 비용 감소 | 환경부 |   |
| 269  | ◦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완화 (항구)  
  - (현행)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사용을 폐쇄·중료 또는 교체 전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누출검사를 받아야함  
  - (개선) 폐쇄·중료 또는 교체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면제 | 연간 누출검사 비용절감 | 환경부 |   |
| 270  | ◦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정기검사 완화 (항구)  
  - (현행)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신고를 한 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
  - (개선) 사업장내 정검대상 비산누출시설수 조정 | 업체별 점검비용 절감 | 환경부 |   |

### 4-1 검사의무
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266  | ◦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검사 면제 (항구)  
  - (현행)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장이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게 해야 함  
  - (개선) 지도점검(오염도점검)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 한시적(2년)으로 그 해 또는 다른 해 자가 측정 면제 | 연간 자가측정 비용부담 18억원 완화 | 환경부 |   |
| 267  | ◦ 제조·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유예 (항구)  
  - (현행) 제조·수리공장의 지정 및 기간 경신 시 추가로 연1회 현장 조사하도록 규정  
  - (개선) 현장조사를 1년간 한시 유예 | 기업 생산현조 비용 절감 | 관세청 |   |
| 268  | ◦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점검 대상 확대 (항구)  
  - (현행) 비산누출점검 난해시설의 비율이 총 비산누출시설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10%범위까지 추가로 인정  
  - (개선) 난해시설의 제외 한계를 30%로 하되 환경청과 협의하여 10% 이상도 확대 가능 | 점검비용 및 시설개선 비용 감소 | 환경부 |   |
| 269  | ◦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완화 (항구)  
  - (현행)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사용을 폐쇄·중료 또는 교체 전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누출검사를 받아야함  
  - (개선) 폐쇄·중료 또는 교체되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면제 | 연간 누출검사 비용절감 | 환경부 |   |
| 270  | ◦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정기검사 완화 (항구)  
  - (현행)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신고를 한 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
  - (개선) 사업장내 정검대상 비산누출시설수 조정 | 업체별 점검비용 절감 | 환경부 |  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71</td>
<td>수도용제품 KS인증 및 KC인증의 공장심사 상호인정(항구)  - (현행)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KS인증 및 KC 인증 정기검사 시 유사한 공장심사가 중복  - (개선) KS인증 및 KC인증의 경기검사 시 공장 심사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상호 인정</td>
<td>실사비용 절감</td>
<td>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272</td>
<td>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완화(항구)  - (현행) 성형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길이 기준은 100mm 이하로 규정  - (개선)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100mm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</td>
<td>기술개발 촉진 및 제작자 및 사용자 편의 증진</td>
<td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273</td>
<td>고형연료제품 제조·보관시설 검사기준 완화 (항구)  - (현행)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과정에서 화재, 품질 변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창고 내 간락이 설치, 상중하부 온도계 설치의무화 등을 규정  - (개선) 고형연료제품 제조·사용시설 중 보관시설의 검사기준 일부 완화</td>
<td>업계 불편 최소화</td>
<td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274</td>
<td>다중이용시설 측정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 (항구)  - (현행) 다중이용시설 등은 법에서 정한 권고기준 5개 항목에 대해 2년에 1회 자체측정을 실시  - (개선) 오존 발생률이 발생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물질의 측정의무 면제</td>
<td>자체측정 부담비용 절감</td>
<td>다중이용시설 등의 살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(16.12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275</td>
<td>가스시설 증북 법정검사에 따른 부담 완화(항구)  - (현행) 정밀방향선단 및 안전점검대가 같은 해에 받아야 함  - (개선)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 위내에서 피검사자가 회망시 검사 시기 조절 가능</td>
<td>업소당 업무부담 비용 절감</td>
<td>가스3법 운영에 관한 협정 개정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76</td>
<td>위상배열초음파검사(PAUT) 방식 도입(항구)  - (현행) 도시가스배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방식으로 방사선등사검사(RT)만 허용  - (개선) 위상배열초음파(PAUT) 검사 추가  *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</td>
<td>일반도시가스사 및 가스공사의 약 166.8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</td>
<td>KGS GC205 (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 시험 기준)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77</td>
<td>법정 에너지진단 주기 면제(항구)  - (현행)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(매 5년) 완화 등 인센티브 부재  - (개선) 에너지경영시스템(ISO 50001)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성과를 검증받은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주기 1회(5년) 면제</td>
<td>우수사업자 진단주기 면제로 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</td>
<td>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(16.9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78</td>
<td>SAC(시스템에어컨) 모듈모델 신기술(Net) 인증 취득 간소화(항구)</td>
<td>적용업체확선서 심사 수수료절감</td>
<td>신기술(Net) 인증제도 운영요령 (16.6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신기술 적용업체 인증심사시 제품의 개별 모델별로 평가 및 모델별 공인시험성적서 요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신기술 적용업체 인증시 평가대상을 ‘개별 모델’–‘대표모델’로 환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79</td>
<td>무선국의 중복검사 부담 완화(항구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정기검사 유호기간 중의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은 무선국도 정기검사를 다시 받음</td>
<td>시설자 부담 완화 및 감사 행정비용 절감</td>
<td>전과법시행령 (16.6월)</td>
<td>미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변경검사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호기간을 변경검사일로부터 재산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0</td>
<td>승강기 검사기준 개선(항구)</td>
<td>승강기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승강기 검사, 정밀안전검사기준은 한국산업표준(KS)에 따르도록 규정</td>
<td>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신기술 승강기 등 승강기 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‘성능형 승강기 검사기준’ 도입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1</td>
<td>전 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GMP(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 중복평가 개선(항구)</td>
<td>GMP 중복평가 개선으로 위탁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절감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동일한 품목으로 여러 허가받은 제조소에 해당품목과 모든 공정을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경우도 위탁사가 중복으로 GMP 평가를 받음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위탁받은 업체의 GMP 적합판정서 제출 시 의약품의 GMP 평가 면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2</td>
<td>바이오의약품 GMP 현장실사 생략기간 연장(항구)</td>
<td>사업자 부담 완화 관련 실사비용 부담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품목(변경)허가전 당해 품목별 GMP실시 상황 평가 시 현장실사 이력이 있는 작업소에 대해 1-2년이내 실사생략(서류평가)</td>
<td>바이오의약품 허가 전 제조소 GMP 실태조사 수행지침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품목(변경)허가전 당해 품목별 GMP실시 상황 평가 시 현장실사 이력이 있는 작업소에 대해 1-2년이내 실사생략(서류평가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3년 이내 실사생략(서류평가)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3</td>
<td>축성판매제조·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(항구)</td>
<td>중소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경감으로 투자활력 제고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축성판매 제조·가공업소는 식품유통법에 9개월 또는 3개월마다 1회식 자가품질검사 실시</td>
<td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(16.10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자가품질검사 주기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 이용기관(HACCP)을 준수하면서 HACCP 정기 평가 결과 95% 이상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84</td>
<td>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경고조항 신설(한시)</td>
<td>사업자에게 과징금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반행위 억제</td>
<td>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(167월)</td>
<td>방통위</td>
</tr>
<tr>
<td>285</td>
<td>특허보세구역 운영인 특허취소 기준 완화(한시)</td>
<td>등록취소에 따르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부담 경감</td>
<td>관세법 (169월)</td>
<td>기재부</td>
</tr>
<tr>
<td>286</td>
<td>중소 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(한시)</td>
<td>중소기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</td>
<td>공문 조치 (165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87</td>
<td>중소 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(한시)</td>
<td>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</td>
<td>공문 조치 (165월)</td>
<td>산업부</td>
</tr>
<tr>
<td>288</td>
<td>폐기물해양배출용 동록취소 처분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(166월)</td>
<td>해수부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89</td>
<td>수출입 수산물 검역시 휴대용 미신고 과태료 감면(항구)</td>
<td>수산질병관리법 시행령 (166월)</td>
<td>해수부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290</td>
<td>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 개선(항구)</td>
<td>경미한 법률 위반시 과태료 부담 완화</td>
<td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공유수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 관련 자료제출·보고 위반 또는 검사 거부·방해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과태료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경감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1</td>
<td>항로표지관리원 업무정지 완화(항구)</td>
<td>타법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정지 수준 완화하여 임세 근로자의 부담 완화</td>
<td>항로표지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해수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항로표지관리원이 허가조건 미이행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4개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1차 위반 업무정지 4개월을 3개월로 완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2</td>
<td>원산지 표시법 과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(항구)</td>
<td>업체 부담 감소</td>
<td>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농식품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과정금 규모가 상당한 경우도 일시 납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과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3</td>
<td>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향리화(항구)</td>
<td>사업장 운영 안정성 제고</td>
<td>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(16.6월)</td>
<td>환경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의 신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원료·연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자가 측정값이 불검출로 나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벌칙 적용 제외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4</td>
<td>대규모유통업법 과정금 세자규정 완화(항구)</td>
<td>과정금 부담 완화로 유통 업체의 영업활동 촉진</td>
<td>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정금 부과기준 고시 (16.6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범위반사업자에게 관련 납품대금·임대료의 20~60%의 부과기준율을 곤해 과정금을 부과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관련 납품대금·임대료 × 부과기준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과정금 산정 시 법위반금액 비율'을 추가하여 과정금 수준을 합리화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관련 납품대금·임대료 × 범위반금액비율(범위반금액/관련 납품대금·임대료) × 부과기준율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295</td>
<td>공정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정금 가중 항목의 통합 및 개선(항구)</td>
<td>불필요한 중복 부과를 제한하여 과정금 부과의 합리성 및 업계 부담 완화</td>
<td>과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(16.9월)</td>
<td>공정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범위반에 따른 과정금 산정 시 2차례에 걸쳐 과정금 최종 액수를 조정하고 있으나, 1차 및 2차 조정 항목의 중복비용 존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1차 :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위반시 20~50% 가중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* 2차 : 3년 이내 조치 받은 위반행위의 동일한 유형의 범위반시 5~20% 가중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2차 조정 항목과 ‘동일유형 범위반시 가중’을 1차 조정 항목과 ‘반복 범위반시 가중’으로 통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순번</td>
<td>과제명/개선내용</td>
<td>기대효과</td>
<td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d>
<td>소관부처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296  | ◦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부담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산업재해조사서 미제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
  - (개선) 신규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장의 경우 1차로 15일간의 시정기회 부여 | 영세사업장 부담 감소  
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16.6월) | 고용부 |
| 297  | ◦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 연장(항구)  
  - (현행)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 
  - (개선) 건축허가 후 착수 가능기간을 1년→2년으로 연장 | 국민의 경제적, 시간적 비용 부담 완화  
  건축법 시행령 (16.6월) | 국토부 |
| 298  | ◦ 비의도적 청소년 주류 판매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경감(항구)  
  - (현행)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(1차)의 행정 처분이 부과  
  - (개선) 청소년 흡연 증가방지 및 강박 등에 의한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경감 |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자 생계 및 영업권 보장  
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299  | ◦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(항구)  
  - (현행)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며, 금액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납부  
  - (개선)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|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
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(16.6월) | 식약처 |
| 300  | ◦ 화장품 범행 위반업체 행정처분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화장품 내용표시 부적합의 경우 일률적으로 품목 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 
  - (개선) 내용표시 기준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양형을 차등 적용  
  * 20%이상 부족 : 품목제조정지 2개월, 10~20% 부족 : 1개월, 10% 미만 부족 : 시정명령 | 기업체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행정처분 시행  
  화장품법 시행규칙 (16.6월) | 식약처 |
| 301  | ◦ 식품조제판매업자·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(항구)  
  - (현행) 가격표시 의무 위반시 식품조제업과 즉석 판매업자 행정처분 처분 적용  
  - 식품조제업 : 시정명령(1차), 영업정지 7일(2차), 영업 정지 15일(3차)  
  - 즉석판매업자·가공업 가격표시 의무 : 영업정지 7일(1차), 영업정지 15일(2차), 영업정지 1개월(3차)  
  - (개선) 식품조제판매업·가공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조제업과 동일하게 적용·완화 |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자 부담 완화  
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(16.10월) | 식약처 |
<table>
<thead>
<tr>
<th>순번</th>
<th>과제명/개선내용</th>
<th>기대효과</th>
<th>개정 법령 (개정시기)</th>
<th>소관부처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302</td>
<td>식품점객업소 조리식품의 대장균 검출 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조리식품의 폐기 비용 감소, 행정처분 부담 완화</td>
<td>식품의 기준 및 규격 (16.6월)</td>
<td>식약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 음성 관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개선) g당 10이하로 관리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03</td>
<td>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완화(항구)</td>
<td>과도한 부담 해소 및 엄정한 법집행 가능</td>
<td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16.6월)</td>
<td>안전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'안전시설 등의 공사 종료 신고' 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조정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(현행)300만원 → (개정) 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300만원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(151건)
목차

1. 무인이동체 분과
   가. 무인기 (과제 1-14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3
   나. 자율주행차 (과제 15-24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6

2. ICT 융합 분과
   가. 클라우드 I (과제 25-28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9
   나. 사물인터넷 (과제 29-38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0
   다. 클라우드 II (과제 39-47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2
   라. 빅데이터 (과제 48-65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4

3. 바이오헬스 분과
   가. 정밀재생 (과제 66-69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9
   나. 바이오신약 (과제 70-101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70
   다. 3D 프린팅 (과제 102-116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79

4. 에너지 신소재 분과
   신재생에너지 (과제 117-124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 82

5. 신서비스 분과
   가. O2O (과제 125-138번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84
   나. 펀테크 및 금융분야 (과제 139-151번) .............. 88
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

○ 과제번호별 분야
- 1-24번 : 무인이동체
- 25-65번 : ICT융합
- 66-116번 : 바이오헬스
- 117-124번 : 에너지신소재
- 125-151번 : 신서비스

○ 개선방안 읽는 법
- 기조치 : 건의내용을 이미 조치
- 수용 : 건의내용을 소관부처가 수용하여 제도개선 추진
- 일부수용 : 건의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을 결정
- 대안마련 : 건의내용에 대해 소관부처가 대안을 마련
- 규제존치인정 : 위원회가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결정
- 추가논의 : 사실관계 확인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

○ 비고 읽는 법
- * : 주요 통계 또는 현황
- ◇ :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
- ★ : 주요 해외사례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.</td>
<td>무인이동체 분과</td>
<td>가. 무인기 (과제 1~14번)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무인비행장치 시험사업 비행계획 수시 변경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기조칙) 여타 시범사업자와 중복비행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중</td>
<td>* ‘15.12~’17.12월간 부산, 대구, 영월, 고흥, 전주 등 5개 시범 공역을 운영하여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지원</td>
</tr>
<tr>
<td>2.</td>
<td>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기간 확대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동일지역을 반복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 허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적용('16.9월)</td>
<td>◆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개정 필요</td>
</tr>
<tr>
<td>3.</td>
<td>무인비행장치 조종 준수사항 명확화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등 내용을 포함한 안전가이드 앱 제공('16.7월)</td>
<td>★ 미국,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가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, 비행금지구역·비행장 주변 비행, 야간비행, 비행고도를 제한하는 규제 운영</td>
</tr>
<tr>
<td>4.</td>
<td>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세분화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대안마련) 회전익장치 조종자격을 단축, 다축으로 세분화('16.9월)</td>
<td>* 사용사업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만 조종자 자격증명 필요 ◆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운영대책 개정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5</td>
<td>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범비행 공간 확대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16.3.3 수도권 4곳*에 비행승인 면제(150kg이하) 추가 (서울, 오존, 북좌, 청라)</td>
<td>* 신설 초경량비행장비 비행공역 현황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무인비행장비 시범사업 참여기업 34개사 중 19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나, 시범공역(5개)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</td>
<td></td>
<td>명칭</td>
<td>위치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서부산</td>
<td>경기도 안성 서운동 인리 인근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오촌</td>
<td>경기도 안성 서운동 오촌리 인근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북좌</td>
<td>경기도 안성 보개면 북좌리 인근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청라</td>
<td>인천시 서구 백석동 인근</td>
</tr>
<tr>
<td>6</td>
<td>원전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범위 축소</td>
<td>국토부 (항공관제과)</td>
<td>(수용) 비행금지구역 범위 축소 검토 동의,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등 안보기관 추가 협의(~'16.6월)</td>
<td>◦ 항공고시보(NOTAM) 개정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원전시설 반경 19km, 고도 5.5km는 비행금지구역 범위</td>
<td>국방부 (기본정책과)</td>
<td></td>
<td>* 미국은 9.11테러 직후 원전시설 주변 비행금지 범위를 강화하였으나, 현재는 반경 5km, 고도 2000ft(6백m)로 완화</td>
</tr>
<tr>
<td>7</td>
<td>무인비행장비 시범사업 구역내에서 주파수(900MHz, 2.4GHz) 사용 허용</td>
<td>미래부 (주파수 정책과)</td>
<td>(일부수용) 900MHz는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, 사고 위험으로 허용 불가하나 2.4GHz는 시범사업용 등으로 요청시 영향분석 후 허용</td>
<td>* 904<del>915㎒ 대역은 KT 이동통신, 국내 비면허 대역인 917</del>923.5㎒는 IoT용으로 사용 중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현재 무인기는 대부분 비면허 주파수대역인 900㎒ 또는 2.4㎒ 사용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8</td>
<td>주파수 채널별 대역폭 등 기준 마련</td>
<td>미래부 (전파연구원)</td>
<td>(기조차) 무인항공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('15.12월)</td>
<td>* 무인비행장비 지상제어용 주파수(5,030  5,091㎒)에 대한 안테나 공급전력, 점유주파수 대역폭 등 기술기준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9</td>
<td>민수용 무인기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완화 운영</td>
<td>산업부 (무역안보과)</td>
<td>(기조칙) 민수용 무인기에 대해 전략물자 완화 규정 적용 중(‘15.7.20)</td>
<td>★ 일본-유럽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통제, 미국은 국내에 비해 엄격</td>
</tr>
<tr>
<td>10</td>
<td>비행승인 및 활영허가절차 간편화 - 비행승인(항공청, 국방부), 항공촬영허가(국방부)로 허가기관 이원화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 국방부 (기본정책과, 국방정보본부)</td>
<td>(수용)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는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(국토부, ‘16.12월)하고 항공 촬영허가 지침서 개정(국방부, ‘16.12월)</td>
<td>★ 미국의 비행승인관리기관은 연방항공청(FAA), 영국은 민간항공관리국(CAA)</td>
</tr>
<tr>
<td>11</td>
<td>무인비행장치 사업법의 제한규정의 네거리비 방식 전환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무인비행장치 사업법위를 국민안전, 사생활침해가 없는 경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(‘16.9월)</td>
<td>★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</td>
</tr>
<tr>
<td>12</td>
<td>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 - 자체 중량 12kg가 넘는 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시험비행 시마다 사전 비행신고 필요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자체중량 12kg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으로 비행승인 예의 기준 완화(‘16.9월)</td>
<td>★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- 55 -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3</td>
<td>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신규기업 참여 확대</td>
<td>국토부 (첨단항공과)</td>
<td>(수용) 공모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기업 기회 부여(16.12월)</td>
<td>*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(‘15.12월 ~ ‘17.12월) : 공공기관·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5개 대표기관 선정</td>
</tr>
<tr>
<td>14</td>
<td>국책연구기관 보유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에 개방</td>
<td>미래부 (정보통신 방송기술 정책과) 산업부 (자동차항공과)</td>
<td>(기조치) 전자통신연구원, 항공우주연구원은 무인기 관련 기술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, 온라인(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)%EC%9D%84">www.ntis.go.kr)을</a> 통해 국가과학기술정보 제공 중</td>
<td>★ (미국) 기술이전 가능 기술을 웹사이트 공개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### 1. 무인이동체 분과

<table>
<thead>
<tr>
<th>나 자율주행차 (과제 15~24번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5</td>
</tr>
<tr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6 | 정부 R&D 지원 과제수 제한(총량제) 해제  
- 동일기간 동안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R&D 과제수를 중소기업은 3개, 중견기업은 5개로 한정 |
<p>|    | 산업부 (산업기술 개발과) | (수용) 올해 중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추진(‘16.12월) | ◯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|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7</td>
<td>정부 R&amp;D 중소기업, 현금부담비율(40%) 하향 조정&lt;br&gt;- 현금보유가 비교적 적은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기업에게 R&amp;D과제 현금부담비율 조정 필요</td>
<td>산업부 (산업기술 개발과)</td>
<td>(규제존재인정) 기업의 현금부담금 상향은 수행기관의 R&amp;D과제&lt;br&gt;몰입도를 높여 R&amp;D 성과증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이 목적으로서, 기업의 책임있는 과제 수행 의지를 갖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</td>
<td>* 중소기업 부담금 현황 (원천기술형과제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구분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소관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중소기업 부담급 (총사업비 대비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부담금의 현금부담률 (실질 현금부담비율)</td>
</tr>
<tr>
<td>18</td>
<td>자율주행 시험장 개방·지원</td>
<td>국토부 (첨단자동차 기술과)</td>
<td>(수용) 임시운행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, 수요일정에 따라 사전 주행시험장소를 확충 예정</td>
<td>* 4월, 2대의 공단 시험로 사용 신청 접수</td>
</tr>
<tr>
<td>19</td>
<td>학교 운동장 등의 자율주행 실적 인정(임시운행)</td>
<td>국토부 (첨단자동차 기술과)</td>
<td>(수용) 반드시 사전시험주행을 시험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대학내 도로, 단지내 시설 등에서의 사전시험주행 실적을 인정할 계획(즉시시행)</td>
<td>★ (영국) 폐쇄된 도로 등에서 사전 주행 실시</td>
</tr>
<tr>
<td>20</td>
<td>국가 간 “임시운행 허가 상호 인정” 추진</td>
<td>국토부 (첨단자동차 기술과)</td>
<td>(규제존재인정)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일부 개발용 자율주행차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고, 임시운행허가 기준과 운영환경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가간 상호 인정은 어려움</td>
<td>★ 국가간 상호 인정하고 있는 사례 없으며, 현재 임시운행은 국가별/주별(미국) 승인 중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21   | 국토도로지도 보급 활성화  
- ‘정밀도로지도’를 기업 및 대학 등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가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 시 제공 | 국토부 (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) | (수용) 현재는 직접 방문하여 USB를 수령하고 있으나, 정밀도로지도의 시범구축 기간인 올해 중 보안방안 마련 후, ’17년부터便利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계획 | * 정밀도로지도는 공개 및 국외반출이 제한된 자료로서, 정보활용 시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들을 위한 직접방문 수령 |
| 22   |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요건 간소화 | 국토부 (첨단자동차기술과) | (수용) 임시운행 시험 상 개선점을 취합하여 연말까지 허가요건 개정할 계획(’16.12월) | ★ 미국∙영국∙네덜란드∙캐나다 등 다른 국가와 안전운행요건 규정 동등 수준 |
| 23   | 임시운행 허가구역 “네가티브” 전환 | 국토부 (첨단도로안전과) | (수용) 시험운행구간을 시가지 도로 포함,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동차 제작사, 부품업체 등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(’16.12월) | ★ (미국·네바다주) 시험운행 신청 시 신청자가 명시한 도로에서만 시험운행  
(영국) 브리스톨, 코벤트리, 밀턴케이스 등 지정된 지역에서 시험운행 실시 |
| 24   | 임시운행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 | 국토부 (첨단자동차기술과) | (수용) 향후 법령개정(’16.12월) 및 예산확보를 통해 데이터 센터 구축방안 검토 | 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
★ (미국) 교통부 주관으로 NHTSA가 V2X 실현을 위한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 시행(500억원 규모)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5-28</td>
<td>2. ICT 융합 분과</td>
<td>가. 클라우드 I (과제 25~28번)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5</td>
<td>금융정보시스템 망분리 의무 완화(금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물리적 망분리 의무 완화)</td>
<td>금융위(전자금융과)</td>
<td>(일부수용)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금융자산 처리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(‘16.9월)</td>
<td>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 개정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| 26   | 사이버 대학의 설비기준 개선(클라우드 서비스 활용가능하도록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설비기준 완화) | 교육부(여리닝과) | (수용)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(‘16.6월) | 원격교육설비기준고시(교육부 고시) 표1, 표3 개정 |

| 27   | 전자금융업 허가시 “557규정” 완화(금융회사 전체 인력 중 5%는 IT인력으로, IT인력 중 5%는 정보보호 인력으로, 전체 IT예산중 7%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토록 한 규제 완화) | 금융위(전자금융과) | (수용) 인력·예산 요구추가 기한을 신규등록 허가 후 당해 연도말이었던 것을 두 번째 연도말까지 갖추도록 완화(‘16.12월) | 전자금융감독규정(금융위고시) 제8조 제3항 개정 |

<p>| 28   | 전산실 내 무선통신망 사용 허용(금융기관은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를 통해 해당 전산실내에서 무선통신망 사용 허용) | 금융위(전자금융과) | (일부수용)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의 허용 무선통신망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(‘16.9월) | 전자금융감독규정(금융위고시) 제11조 등 개정 |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29</td>
<td>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 등급 완화 -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W의 의료기기 분류에 따른 높은 규제 등급 완화 (3등급→2등급으로 완화)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 정책과)</td>
<td>(수용)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 S/W에 대한 품목을 재분류 또는 제출화('16.10월)</td>
<td>•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(식약처고시) 제3조, 열고 개정</td>
</tr>
<tr>
<td>30</td>
<td>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등급 완화 - 의료데이터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게이트웨이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·심사 제외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 정책과)</td>
<td>(수용) 의료데이터만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을 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완화('16.8월)</td>
<td>•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(식약처고시) 제3조, 열고 개정</td>
</tr>
<tr>
<td>31</td>
<td>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-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허용</td>
<td>복지부 (약무정책과)</td>
<td>(수용) 각 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('16.10월)</td>
<td>• 현행법은 ‘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’만을 허용(약사법 제50조)</td>
</tr>
<tr>
<td>32</td>
<td>버스에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추진 - 택시상단에는 디지털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버스에는 허용되지 않음</td>
<td>행자부 (주민생활 환경과)</td>
<td>(대안마련) 근거 마련 후, 교통수단(버스 등)을 이용한 광고물 시범사업 실시('16.7월)</td>
<td>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33</td>
<td>호넷트워크 설비 기술기준 완화</td>
<td>산업부(전기전기과)</td>
<td>(수용) 호넷트워크에 적용하는 프로토콜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개선('16.5월)</td>
<td>• 지능형 호넷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(고시) 개정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현재 호넷트워크 중 호케이트웨이에 적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KS X 4501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★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춰 각각 호넷트워크 표준 제정 중 등</td>
</tr>
<tr>
<td>34</td>
<td>콘센트 단극차단 기술 허용</td>
<td>산업부(국가기술 표준원)</td>
<td>(규제준칙인정) 현재 국가 전기 인프라 특성상 단극차단만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단극차단 허용은 곤란</td>
<td>★ 해외는 Live·Neutral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Live극에 특징해서 스위치 단극차단 가능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콘센트의 양극차단 개폐소자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콘센트 성능개선 및 새로운 부품개발이 어려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미 국</td>
</tr>
<tr>
<td>35</td>
<td>온라인 평가를 위한 디지털 저작물 전송 허용</td>
<td>문체부(저작권 정책과)</td>
<td>(기조칙) 디지털 저작물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가능하도록 “공중송신” 개념을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</td>
<td>• 저작권법 제32조 개정 (국회계류중)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오프라인 활용은 가능하나 온라인 활용(전송) 불가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36</td>
<td>원격교육서비스 설비기준 완화</td>
<td>교육부(이니니과)</td>
<td>(수용) 최신 ICT기술을 반영하여 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설비기준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개선('16.6월)</td>
<td>• 원격교육 설비 기준(교육부 고시) 개정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- 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 설비기준은 기술발전에 따른 유연한 기술적용에 한계가 있음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37   | **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(1)**  
- 해외법인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기술(ICT) 서비스를 할 경우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어 제도개선 마련 필요 | 방통위 (이용자 총괄과) | *(기조치)* 현행 법에서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여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국내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| ★ 프랑스 법원은 나치 기념물품의 전시·판매를 호스트하고 있다는 야후에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 못하도록 조치 명령(‘00.11월) |
| 38   | **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(2)**  
- 모바일(In-App) 결제 시 반복적인 고지의무를 하도로 한 ‘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가이드라인’이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발생 | 방통위 (이용자 보호과) | *(기조치)* 현재 가이드라인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동등하게 규제하고 있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ICT융합 분과
다. 클라우드 II (과제 39~47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39   | **클라우드 도입 가능한 고시 제정**  
-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경우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| 복지부 (보건의료 정책과) | *(수용)*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(‘16.7월) | ◇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 제정  
★ 일본의 후지쓰는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인터넷을 통해 병원 뿐만 아니라 재택 의료 현장 등에서도 간병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"황진선생(在診先生)" 서비스를 시작(2013.1) |
| 40   | **클라우드 사용 관련 유권해석 필요**  
-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경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해석이 불명확 | 복지부 (보건의료 정책과) | *(수용)*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개선(‘16.7월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41   | 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 
- 개인식별이 가능한 의료정보에 대한 명확한 익명화 기준 정립 필요 | 복지부  
(보건의료 정책과)  
행자부  
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 | (수용)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,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 마련·배포('16.12월) | ★ HIPAA(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)(미국) 가이드라인에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등의 없이 의료인 등의 이용 및 공개 허용 |
| 42   | 맞춤형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 
- 코호트 연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필요 | 복지부  
(생명윤리 정책과) | (수용) 코호트 연구의 경우 고유식별번호(주민번호)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'16.12월) | 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신설 |
| 43   | 유전자보관용 전산실 시설·장비 완화  
- 대용량의 유전자정보를 클라우드에 보관·분석을 대행하게 할 경우 원심분리기, 초저온냉동고 등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한 규제 완화 | 복지부  
(생명윤리 정책과) | (기조칙) 유전자정보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정보관리실, 전산장비 및 데이터시스템의 전산시설 장비만 갖추도록 하고 있음 | |
| 44   | 의료기록 열람 허용  
- 의료진이 아닌 의료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은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등이 불가함 | 복지부  
(의료기관 정책과) | (대한마련)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,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·연구목적 활용 기준 마련·배포('16.12월) |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45</td>
<td>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</td>
<td>복지부 (보건의료 정책과)</td>
<td>(수용) 전자의무기록(EMR)시스템 도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, 병원간 진료기록 공유를 위해 용어·서식 등의 표준 마련 예정(‘16.12월)</td>
<td>★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의 교류와 이용을 위한 표준화된 EHR(Electronic Health Records) 구축 추진 중</td>
</tr>
<tr>
<td>46</td>
<td>병원간 의료정보 온라인 전송 허용</td>
<td>복지부 (보건의료 정책과)</td>
<td>(기초)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타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됨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47</td>
<td>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</td>
<td>복지부 (보건의료 정책과)</td>
<td>(기초) 이용서약서에 명시된 “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”라는 문구 삭제함(‘16.3월)</td>
<td>■ 이용서약서 개선</td>
</tr>
<tr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</td>
<td>□ 위치정보법 개정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2. ICT 융합 분과 (과제 48~65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48</td>
<td>위치정보사업 허가제도 완화</td>
<td>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일부수용) 개인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한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검토(‘16.12월)</td>
<td>★ (미·EU·일) 통신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(LBS) 제공을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라. 빅데이터 (과제 48~65번)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49</td>
<td>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 완화 - 허가기간 1개월로 단축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요구</td>
<td>방통위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대안마련) 허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의 직접방문 제출외에 우편제출도 허용('16.12월)</td>
<td>위치정보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</td>
</tr>
<tr>
<td>50</td>
<td>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무 완화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수·합병 및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신고의무 완화</td>
<td>방통위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수용)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수·합병 시 변경사항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사항 간소화('16.12월)</td>
<td>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</td>
</tr>
<tr>
<td>51</td>
<td>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필요 - 단기적으로 명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‘정의’조항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법률 개정 추진</td>
<td>행자부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</td>
<td>(수용) 관련부처와 협동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구체화하는 “개인정보 통합 법해설서” 마련('16.6월)</td>
<td>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검토</td>
</tr>
<tr>
<td>52</td>
<td>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 명확화 등 -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비식별화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정보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필요</td>
<td>행자부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</td>
<td>(수용) 관계부처 협동으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('16.6월)</td>
<td>★ (미국) 비식별화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목적의 이용, 제3자 제공을 폭넓게 허용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- 65 -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53</td>
<td>신체정보 수집·활용 근거 마련 - 착용형 스마트기기로부터 수집되는 신체정보 수집·분석·처리할 수 있는 근거정립 마련</td>
<td>행자부 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수용) 비식별화된 신체정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(’16.6월)</td>
<td>★ (미국) 비식별화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을 폭넓게 허용</td>
</tr>
<tr>
<td>54</td>
<td>개인정보 사전동의(opt-in) 제도 개선 - IoT환경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보주체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후거부방식(opt-out) 허용</td>
<td>행자부 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수용) IoT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 사전동의(opt-in)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후거부방식(opt-out) 추진(’16.12월)</td>
<td>◇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위치정보법 등 개정, ★ EU는 사전동의(opt-in)를 원칙으로 하되, 계약 이행, 법률상 의무준수 등 불가피한 경우 동의 면제</td>
</tr>
<tr>
<td>55</td>
<td>위치정보 사후거부방식(opt-out) 허용 - 사물위치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사전동의 방식(opt-in)이 아닌 사후거부 방식(opt-out)으로 허용</td>
<td>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수용) 전면적인 사후거부방식(opt-out) 허용은 어렵지만 ‘법제정비 연구반’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 검토(’16.12월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56</td>
<td>개인정보 관련법 통합 -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위치정보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단일법률 체계 제정 필요</td>
<td>행자부 (개인정보 보호정책과)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</td>
<td>(대안마련) 개별법령은 유지하되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용어 및 처리원칙 등 기준 마련(’16.12월)</td>
<td>★ (미국)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 없이 분야별 필요에 따라 개별법을 제정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응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57</td>
<td>개인신용정보 위탁시 의무 명확화</td>
<td>금융위 (신용정보팀)</td>
<td>(기초적)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에 위탁할 경우 개인 사전동의를 예외로 하고 있고, 보고범위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자체교육 이행 시 이를 인정하고 있음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58</td>
<td>빅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등</td>
<td>미래부 (융합 신산업과)</td>
<td>(수용) 민간 데이터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선도 시범사업 추진(‘16.7월~12월)을 통해 빅데이터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(‘16.12월)</td>
<td>★ (미국) 빅데이터 시장(46조원)과 데이터 유통 관련 시장(242조원)이 구분되고 ‘데이터 가공 및 거래 산업(브로커)’ 활발</td>
</tr>
<tr>
<td>59</td>
<td>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</td>
<td>미래부 (융합 신산업과)</td>
<td>(대안마련)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작자 표시 활성화 지원(‘16.12월) 및 저작권 찾기 서비스 추진(연중)</td>
<td>★ 미국 저작권청, 일본 문화청, 독일 등에서 저작권 정보검색, 권리자 등을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, 빅데이터베이스(DB)의 ‘가치와 가격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

★ DB구축에 비용합산법 적용 권고(UN, SNA(System of National Accounts, 2008))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60   | 공공데이터 활성화 촉진  
-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및 비식별화, 업데이트 등 방안 마련 필요 | 행자부 (공공정보 정책과) | (수용) 공공데이터를 각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과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‘공공 데이터 개방표준’을 추가 제정(‘16.12월)하고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추진(‘16.12월) |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 개정 |
| 61   | 공공데이터 평가-인증 강화  
| 62   | 공공기관 오픈API 제공지침 명확화  
- 부처 및 공공기관별 오픈API 제공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| 행자부 (공공정보 정책과) | (수용) 공공데이터 오픈API 제공 지침 명확화(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반영, ‘16.5월)를 통해 오픈API 제공 체계적 관리 추진 | 공공데이터 오픈API 제공절차 가이드라인 개정  
*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 Interface) : 에를 들어, 포탈이 제공하는 지도, 날씨 등 정보와 같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자유롭게 활용토록 제공 |
| 63   | 부당한 개인정보 관리의무 완화  
-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SaaS(Software as a Service) 업체에게 개인정보의 폐기 및 관리의무 완화 |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 | (기초) 개인정보 파기·관리 의무 대상은 위탁자이며 수탁자(SaaS)인 클라우드 업체는 대상이 아님 |  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64   |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개선  
- 개인정보 저장 목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외이전 규정에 의해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제 완화 |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 | (기조치)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동의절차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('16.3월) | |
| 65   | 개인 위치정보 통보요건 완화  
-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해당마다 제공일시, 제공목적 등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 완화 | 방통위 (개인정보 보호윤리과) | (기조치)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매화마다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보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('15.8월) | ★ 미국은 전자통신법상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통보의무 없음 |

3. 바이오헬스 분과

가. 정밀재생 (과제 66～69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66   |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 
- 19개 유전자 검사 항목 금지·제한으로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질병예방, 식이조절 등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 지해 | 복지부 (생명윤리 정책과) | (수용) 현행 금지항목에 대하여 광범위 제공토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·운영('16.5월)하고 개선사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령개정 추진('16.12월) |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|
| 67   | 뇌조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 
- 인체유래물이나 시신 유래물의 취급·관리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질적 뇌조직 연구 제한 | 복지부 (생명윤리 정책과) | (수용) 시신유래물 연구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·운영('16.8월)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('16.12월) |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체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68   | 비동결난자 연구용细细 허용  
-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잔여난자  
범위를 동결 난자로만 한정하고  
있어 동결 · 해동과정에서 난자의  
질 지하로 실험결과 도출 어려움  | 복지부  
(생명윤리 정책과)  | (미 해결과제) 난자 재취시 여성 건강  
침해, 난자 매매 가능성 등으로 제외  
수정에 우선 사용 후 잔여난자 연구  
사용 가능도록 규정,  
학교의 논의를 거쳐 종교계, 여성을  
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| ★ 미국(일부 주), 영국  
제한적 허용 |
| 69   | 잔여배아 연구대상 확대  
-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 
희귀 · 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 
창의적 연구를 제한하므로  
후천성면역 결핍증(AIDS) 등  
연구대상 질병 추가 필요  | 복지부  
(생명윤리 정책과)  | (수용) 잔여배아를 활용한 연구에  
후천성면역 결핍증(AIDS) 등을  
연구대상 질병으로 추가  | ★ 영국은 연구대상 범위  
광범위하게 인정 |

3. 바이오헬스 분과 나. 바이오신약 (과제 70 ～ 101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70   | 유전자가치료 연구범위 확대  
-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조건을  
충족 시에만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  | 복지부  
(생명윤리정책과)  | (수용) 연구자들의 연구범위에 대한  
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  
연구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 
마련하고(‘16.9월), 의견수렴 및  
개정안 작성 등 생명윤리법 개정  
준비(‘16.12월)  | 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
제47조 개정(‘15.12.29.)  
★ 日은 연구허용 범위에 조건이  
있으나 영국, 미국 등은 배아가  
아닌 체세포 대상 유전자  
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규정이  
없고, 일상시험 승인(FDA 등)  
과정을 통해 안전성 확보 |
| 71   | 유전자치료 범위 완화(70번 과제 동일)  
-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 
치료 불가  | 복지부  
(생명윤리정책과)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72</td>
<td>인체유래물의 제공 관련 규제 완화 - 무상 또는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고품질의 인체유래물 자원 도입을 위해 유상거래 허용</td>
<td>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</td>
<td>(대안마련) 산업촉진을 고려한 인체유래물 수급·분석·보관 등의 실비 보전항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(16.10월)</td>
<td>*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체유래물의 수집·분석·보관,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보전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장이 산정하여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 가능</td>
</tr>
<tr>
<td>73</td>
<td>백신개발 시 영유아 임상시험 개선① - 일반의료기관 임상참여</td>
<td>식약처 (임상제도과)</td>
<td>(기초) 임상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상시험의 경우, 현행 규정상으로도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며,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 등 마련 배포(16.6월)</td>
<td>* 임상실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규정</td>
</tr>
<tr>
<td>74</td>
<td>백신개발 시 영유아 임상시험 개선② - 해외임상결과 인정</td>
<td>식약처 (생물제제과)</td>
<td>(수용) 안전성·유 효성이 확보된 기허가 백신과 유사한 영유아 국가예방 접종백신의 국내개발 시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수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개정(16.7월)</td>
<td>◇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심사 규정 (식약처 고시) [별표1] 개정</td>
</tr>
<tr>
<td>75</td>
<td>재생의료분야 관련 규제 개선 -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에 필요한 원료물질 조달 관련 법규 정비</td>
<td>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</td>
<td>(수용)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하에 원료협약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없고 공급협약을 통해 원료협약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MOU체결 등 지원</td>
<td>* 현재 국내 1개 기업체에서 임상2a상(용법·용량 확인)은 '16년 7월부터 향후 2년 간 예정, 임상2b상(용법·용량 평가)/3상(치료적 확증)은 '18년 이후 실시 예정, 생산은 '22년 목표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</td>
<td>---</td>
<td>---</td>
<td>---</td>
<td>---</td>
</tr>
<tr>
<td>76</td>
<td>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개선①</td>
<td>복지부 (보험약재과)</td>
<td>(수용)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·운영 중이며 바이오시밀러 산정 시 우대방안을 검토·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선 ('16.10월)</td>
<td>‘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’ 고시 [별표1] 개정('16.10)</td>
</tr>
<tr>
<td>77</td>
<td>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개선②</td>
<td>복지부 (보험약재과)</td>
<td>(대안마련)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·운영 중이며 약가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 검토('16.10월)</td>
<td>★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해당국 오리지널 약가의 52~85% 수준으로 국가마다 다양</td>
</tr>
<tr>
<td>78</td>
<td>동물실험 규제 완화</td>
<td>식약처, 농식품부</td>
<td>(수용) 미래부·농식품부·식약처· 복지부·환경부 등 유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‘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 관련 법률 안내서’ 발간('16.9월)</td>
<td>* 식약처 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’, 농식품부 ‘동물보호법’ 등 법률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79 | 유전자조각 활용 연구개발 절차 개선 | 질병관리본부 (생물안전관리과) | (대안마련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·실험승인, 변경승인사항 중 예방, 메르스 등 위해가능성이 큰 경우는 개발·실험시 사전승인필요 다만, 처리기간을 60일→30일로 단축 | 규제프리존특별법 제45조 | *
<p>| | | | | 유전자조각 : primer(시발체), probe(프로브), positive control(양성대조물질) 등 |</p>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80</td>
<td>연구목적 하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요건 완화 - 의학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수준의 보호장치만 마련하면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</td>
<td>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</td>
<td>(대안마련)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, 복지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활용하여 의료정보의 비식별화 기준·연구목적 활용 기준 마련·배포('16.12월)</td>
<td>*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 하에 누구나 대리인 자격으로 의료사본 발급이 가능</td>
</tr>
<tr>
<td>81</td>
<td>세포치료제 개발 시 공여자 정보 제출 면제 - 국가중기세포은행에 등록하여 세포에 대한 검증절차가 완료된 경우 세포치료제 개발시 공여자 정보제출 면제 필요</td>
<td>식약처 (바이오의약품정책과) (세포유전자치료제과)</td>
<td>(대안마련) 세포치료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증자의 병력정보가 필요하나, 의료기록 보존기한(10년) 경과로 기증자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존되어 있는 세포를 이용한 안전성 검사(무균, 바이러스 시험 등) 결과로 기증자(공여자) 적합성 대체 가능 * 세포치료제 기증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('16.8월)</td>
<td>(영국) 기증자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으로 대체 (Guidance : Donation of starting material for cell-base advanced therapies)</td>
</tr>
<tr>
<td>82</td>
<td>임상시료에 대한 GCLP 기준 마련 - GCLP :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(임상시험분석 관리기준)</td>
<td>식약처 (임상제도과)</td>
<td>(기조치)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 (GCLP)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‘15.12.24. 국회에 제출</td>
<td>☀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 개정안 및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83   | 난치암에 대한 면역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 
- 세포치료제의 난치성 암치료  
임상시험에 대한 허가를  
의약품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허가토록 완화 | 식약처  
(바이오의약품정책과)  
복지부  
(보건의료재료원) | (대안마련) 회귀질환에 대해서는  
임상증례수를 조정하여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 
식약처, 신약과 같이 허가·평가 연계를 통해  
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방안을 검토(복지부) |  |
| 84   | 면역시험 관련 시료 수량 축소  
- 재사용할 수 없는 시료 특성상 허가 전 시험시료 비용 및 수량 과다로 중소기업 애로 | 식약처  
(의료기기정책과)  
복지부  
(보건의료재료원) | (대안마련) 제품의 안전성 및  
면역효과 확보 문제상 시료재사용 불가, 다만,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 횟수 등을 조정하여  
의약제가 시료 수량 축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 
근거 규정을 개정(16.7월) | "의료기기 안정성 시험" 제3조 및 제4조(식약처 고시) 개정  
★ 국제규격 : ISO11607-1(밀균 및 포장시스템) 및 ASTM 1980 (가속시험 방법)  |
| 85   | 의약제약업 임상시험계획서 요건완화  
- 국내외 의약제약 대상환자 수의 차이가 크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이 가능한 임상시험계획서 요구 | 식약처  
(의약품심사조정과) | (기조취) 임상시험계획서도  
임상환자의 종류와 유의성에  
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 
임상시험시 문헌정보, 병원DB 등에 따른 대조군 설정도 인정되는 등  
현행 규정·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 | ★ 유럽(EMA), Guideline on clinical trials in small populations(2007)  
* 회귀의약품 :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 
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86</td>
<td>일반기기 임상시험 시 관리기준 완화 -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기기를 이용한 연구자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 관리기준 완화</td>
<td>복지부 (생명윤리 정책과)</td>
<td>(기조칙)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기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만으로 연구자 임상시험 가능</td>
<td>* 기관 생명윤리위원회(IRB):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</td>
</tr>
<tr>
<td>87</td>
<td>잔여검체 임상시험 사용 승인 완화 -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IRB 심의 및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모두 받는 절차 개선 요청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)</td>
<td>(기조칙)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잔여검체를 이용한 시험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 계획은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(15.7월)</td>
<td>* 잔여검체 :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 검체</td>
</tr>
<tr>
<td>88</td>
<td>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허용 -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청</td>
<td>식약처 (임상제도과)</td>
<td>(기조칙) 약사법상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만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 않아 현행 규정상으로도 가능</td>
<td>* 임상시험은 ①연구자주도(기초연구) ②기업주도(기초연구 및 상용화) 임상시험으로 구분</td>
</tr>
<tr>
<td>89</td>
<td>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한 시험·평가 개선 - 동일한 제조방법이나 다른 항원으로 변경 시 다른 제품군으로 심사하는 방식 개선 요청</td>
<td>식약처 (세포유전자 치료제과)</td>
<td>(기조칙) 항원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동일 제조사의 동일한 제조방법, 유사한 임상사용경험에 따른 안전성 자료가 있는 경우 동 사례별로 비임상·임상시험 자료 완화 가능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90   | 생물의약품 허가 시 공정밸리데이션 주입량·횟수 조절  
- 조성 및 농도가 동일하고 충전량만 다른 생물의약품 주사제의 경우 process validation 적용 완화 요청 | 식약처 (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) | (기조사) 주사제의 공정 밸리데이션은 원칙적으로 품목별 실시하되, 제조공정, 조성 및 농도가 동일하고 충전량이 다른 주사제의 경우 브라케팅 방법을 적용한 공정밸리데이션 허용 | * 브라케팅 방법 : 용기 충전량이 1, 5, 10mL인 경우 1mL와 10mL 시험자료로 5mL 자료 인정  
*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 [별표1] 개정 완료 ('10.10) |
| 91   | 융복합 유전자치료제 가이드라인 마련  
- 세포치료제, 나노 의약품과의 융합기술에 의한 신개념 융복합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 중이므로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| 식약처 (바이오의약품 정책과, 세포유전자치료제과) | (기조사) 유전자치료제와 관련하여 ‘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임상 향자인 가이드라인’ 등 3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·운영 중이며, 융복합제품 인허가를 위하여 ‘복합·조합품목 처리규정’을 운영 중 | ★ 미국은 FDA OCP(융복합제품 지원국)에서 품목분류, 유전자치료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고 유럽은 첨단 융복합의료제품으로 정의하고,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|
| 92   | 생물학적 제제 출하승인 처리기한 단축  
-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계절성 품목을 제외에 공급하기 위하여 각 제제별 검정항목 중 최대시험 기간에 따른 검정처리기간 단축 요청 | 식약처 (바이오의약품 정책과) | (대안마련) ‘위해도 기반 국가출하승인 제도’ 시행(‘16.4월)으로, 제조사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 신속 출하승인 가능 | ●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,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제9조, 제10조, 제11조 개정 완료 ('11.11.27) |
| 93   | 국제규정(INN, USAN 등)에 맞는 신약물질 성분명 개발 가이드라인 필요  
- 바이오 신약 성분명, 국제일반명 등 명확한 가이드 부재 | 식약처 (유전자재조합 의약품) | (기조사) 현재 관련 규정 및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운영('15.12월) 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 | * INN(세계보건기구 WHO가 부여하는 공식 성분명칭), USAN(미국 AMA가 승인한 국제 의약품명칭)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94   | 유전자치료제 등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 
- 국내 개발·해외제조된 유전자치료제 등의 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신속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| 식약처 (바이오의약품 정책과) | (수용) 국내 개발되어 해외에서 제조된 세포치료제,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추진(‘16.7월) | ●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심사 규정 (고시) 제4조 개정 추진(‘16.7월) |
| 95   | 유전자검사서비스 제도개선  
- 유전자 항목을 신고하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 요청 | 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 | (가조칙) 유전자 검사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검사항목은 우선 신고 수리 후 사후 평가·관리하는 체계로 운영 예정(‘16.11월) |
| 96   | 예측성 질병유전체검사에서의 유전자 신고제도 개선  
- 신고제에 유전자검사 목록결정이 허가제로 운영 중이고 한국인·동양인 대상과 서양인 대상 검사 유전자 항목을 분류하여 신고처리 요청 | 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 | (가조칙)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종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, 유전자 검사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검사항목은 우선 신고 수리 후 사후 평가·관리하는 체계로 운영 예정(‘16.11월) |
| 97   |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 규제 개선  
-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| 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 | (가조칙)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 예방목적의 검사 직접 실시가 가능토록 생명윤리법 개정(‘16.6월 시행예정) |

* 생명윤리법 개정(‘16.6. 시행예정)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98   | 개인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 
- 개인 대상 질병의 스クリ닝 및 발병가능성 예측을 위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지된 유전자 항목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가능토록 요청 | 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 | (기초)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외의 없이 질병 예방목적의 검사 직접 실시가 가능토록 생명윤리법 개정(‘16.6월 시행예정) | * 생명윤리법 개정(‘16.6. 시행예정) |
| 99   |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할인화  
- 기관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요구 지양 및 유전체학 전문가, 유전체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| 복지부 (생명윤리정책과) | (수용)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고, ’16년 3월부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 유전체기업협의회 임원 포함 | ★ (미국) 표준인증제도 CAP 사업에는 전문가만 포함,사업단계 등 미포함 |
| 100  |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공급 시 의료기관의 저가납품 요구 방지  
- 제약사의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체制度改革 보완 요청 | 복지부 (약물정책과) | (수용) 제약협회·관련 업계 등과 퇴장방지의약품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·운영 중이며 퇴장방지의약품이 최소 원가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예정 | ○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(‘고시) 제정안 입법예고(4.26.) |
| 101  |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 완화  
- 신약개발과정이 5-10년 소요되므로 매출기준을 낮추거나 기술이전 실적 등 대안 검토 요청 | 금융위 | (대안마련)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적격기업으로 판단 시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(3년→5년)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 | ○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(‘16.6.)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02  |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의 신속한 코드 부여  
- 건강보험공단 또는 환자본인에게  
 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3D 프린팅  
  환자 맞춤형 의료기에 대해  
  심평의 신속한 코드 부여 필요 | 복지부 (보험급여과) | (기초)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 
  식약처 품목허가와  
  한국보건의약품연구원(NECA)의  
  신의약품등록심의를 동시 진행  
  *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NECA의  
    신의약품등록심의를 거친 경우  
    심평의에서 전문심의회  
    등을 거쳐 코드 부여 (급여,  
    비급여) 결정 | |
| 103  |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 
  대한 비용지원 방안 마련  
-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 
 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 
  비용이 많이 소요 | 복지부 (보험급여과) | (수용) NECA 등 유관기관과 TF를  
  구성하여 “관리체계, 비용지원 방안 등  
  세부 실행계획” 수립(16.12월) 실시  
  ★ 일본은 2013년부터 3D 프린팅을  
  활용한 시술을 승인받은 병원을  
  통해 유 효한 data를 조성하고  
 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청구 허용 | |
| 104  | 3D 프린팅 인체모형에 대한 의료  
  기기로의 인정 요청  
- 의료기기로 인정 시 환자교육 및  
  모의수술 목적 등으로 활성화 가능 | 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) | (기준) 인정사례  
 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 
 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 
  등 의료기기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,  
  의료기기로 관리 시 인허가 동  
 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우려  
  ★ 미국·유럽 등도 의료기기로  
  관리하고 있지 않음 | |
| 105  | 3D 프린터로 제조된 성형용 금형  
  (몰드)의 관리방안 마련  
-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요청 | 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) | (기초)  
  ‘3D 프린팅→성형용  
  물도→의료기기 제작’  
  시 성형용  
  물도는 인체에 접촉·삽입·이식되지  
  않고 성형용 제조에 사용되므로  
  제조품관리에 해당되며, 제조품의  
  품질관리체계(GMP)에 따라 관리 중  
  ★ GMP(Good Manufacturing  
  Practice): 우수성품·의약품  
  제조관리 기준  
  ★ 미국·유럽 등도 의료기기가  
  아니라 제조품으로 제조된  
  품질관리체계(GMP)에 따라 관리 |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06</td>
<td>3D 프린터 관련 S/W의 의료기기로의 인정 요청</td>
<td>(대한마련) 3D 제품 모델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(S/W)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공정의 제조설비에 해당되거나 중장기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·운영(16.4월)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, 의료기기안전평가과)</td>
<td>★ 미국, 유럽 등도 별도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</td>
</tr>
<tr>
<td>107</td>
<td>국산 의료용 3D 프린팅 장비·소재의 검증체계 요청</td>
<td>(대한마련) 3D 프린터로 제작된 최종 출력물은 의료기기로 판단·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며 장비·소재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산업부에서 마련(16.10월)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, 의료기기안전평가과)</td>
<td>★ 미국·유럽·일본 등에서도 3D 프린터 기기 및 소재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</td>
</tr>
<tr>
<td>108</td>
<td>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- 중소형 의료기관이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출력물의 품목허가 등 제약 완화</td>
<td>(대한마련) 절환법 제품 종류, 품질 및 안전성, 처방병원과 처방어래 공연장 사업유형의 벤치마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 구성·운영(16.4월)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, 의료기기안전평가과, 구강소화기기과)</td>
<td>◇ 현재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 의료기기 제작가능</td>
</tr>
<tr>
<td>109</td>
<td>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응급상황 예외조항 도입 - 응급상황 시 의사 책임 하에 3D 프린팅으로 의료기기 제조·사용이 가능토록 혈용 요청</td>
<td>(기초치) 대체 의료기기 및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 허가범위를 벗어난 3D 프린팅 의료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의 책임 하에 변경허가 전 사용 가능토록 고시 개정(16.11월)</td>
<td>식약처 (의료기기정책과)</td>
<td>◇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 ◇ 미 FDA의 주문제작 의료기기 예외조항 및 EU의 주문 제작기기 조항에서 허용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td>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10</td>
<td>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실사방안 마련 - 평가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청</td>
<td>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(구강소화기기과)</td>
<td>(기조치) 처방용 임플란트 정형용 임플란트, 지지체(뼈, 연골, 피부, 혈과) 등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3D 프린팅 가이드라인 발간(16.10월)</td>
<td>*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사례 가이드라인은 마련 ('15.11.)되었으며,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</td>
</tr>
<tr>
<td>111</td>
<td>3D 프린터 KC인증 부담 완화 -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3D 프린터의 경우 기기의 중요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애플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부담 완화</td>
<td>산업부 국표원 (전신통신 제품안전과)</td>
<td>(수용) 파생모델제도로 KC 인증이 간소화되고 있으며, 3D 업계·협회 등의 전국 선포회(연2회)를 추가로 개최하여 적극 홍보하고, 업계·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여부 추가 검토(16.6월)</td>
<td>* 파생모델제도: 기본모델 인증 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변경하지 않고 또 다른 모델을 출시할 경우 등록만으로 출시 가능 ★ 일본, 유럽, 미국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파생모델 제도 운용</td>
</tr>
<tr>
<td>112</td>
<td>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의 적합성평가 완화 - 적합인증을 취득한 USB 동글을 내장한 3D 프린터에 대한 적합인증 면제 또는 완화</td>
<td>미래부 (전파기기과)</td>
<td>(기조치)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무선 분야에 대한 추가 적합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합등록 절차로 가능</td>
<td>★ 미국은 인증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는 「FCC CFR 47 Part2&amp;15 (공통기술기준과 무선기술기준)」에 따라 적합인증(FCC Certification)을 받아야 함 ★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 자동차산업 선두국들도 대체부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</td>
</tr>
<tr>
<td>113</td>
<td>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차량단종 부품의 디자인보호권 제한 -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제작이 가능토록 현행 20년 인디자인 보호기간 축소 요청</td>
<td>특허청 (디자인심사 정책과)</td>
<td>(규제존치인정) 타 산업과의 형평성,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,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권 제한은 균형하며 디자인관리자인 환경차업체와 협력적인 로열티 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</td>
<td>★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 자동차산업 선두국들도 대체부품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14</td>
<td>3D 프린팅 소재에 대한 환경·안전 기준, 출력물 성능기준 마련&lt;br&gt; - 3D 프린팅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 필요</td>
<td>산업부(전자전기과)</td>
<td>(기조차) 업계의 수요가 높은 제조방식에 대해 3D 프린팅 장비, 소재 안전성, 환경유해성 및 출력물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(‘16.10월)</td>
<td>* 업계, 3개 제조방식 주로 사용&lt;br&gt;- FDM(필라멘트형 원료를 녹여 적층), SLA(액체수지를 레이저로 경화), Polyjet(광경화성수지를 자외선으로 경화)</td>
</tr>
<tr>
<td>115</td>
<td>3D 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반영&lt;br&gt; - 금융·세제 등의 혜택이 가능도록 3D 프린터 제조업에 대해 표준산업 분류 요청</td>
<td>통계청 (통계기준과)</td>
<td>(대안마련) 유관부처와 조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분류심의위원,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과정을 거쳐 2017년 1월 고시할 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에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(‘17.1월)</td>
<td>◯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 고시)개정 검토</td>
</tr>
<tr>
<td>116</td>
<td>푸드 프린터 규격 및 식품 위생, 안전 기준 마련&lt;br&gt; - 푸드프리터로 만든 식품에 대한 규격 기준 등 안전관리 기준 요청</td>
<td>식약처 (식품기준과)</td>
<td>(기조차)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푸드 프린터는 식품용 기구로, 식품원료 충전 커터리지는 가공식품으로 관리되며 출력된 음식물은 식품공정에 따른 식품별 기준·규격 및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·규격이 적용되어 관리 중</td>
<td>◯ 제조·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현행 식품위생법령 적용 ★ 독일, 네덜란드, 영국 등 BIPV 대한 인증 없음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### 4. 에너지 신소재 분과  
신재생에너지 (과재 117∼124번)  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17</td>
<td>건물일체형 태양전지에 대한 이중 인증&lt;br&gt;- BIPV 표준인증제도 마련 필요</td>
<td>산업부 (신재생 에너지과)</td>
<td>(수용) KS표준 마련 및 인증 대상 품목 지정(‘16.10월) 예정</td>
<td>◯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(한국산업표준)&lt;br&gt;★ 독일, 네덜란드, 영국 등 BIPV에 대한 인증 없음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18  | 파력발전 REC 가중치 조속 마련  
- 파력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기준 마련 | 산업부 (신재생에너지과) | (수용) 신규 가중치 적용 
연구용역수행(16.3~17.2중, 파력발전 가중치 신설(17.6월) | 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와 제도 및 연료훈집 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 지침 개정  
★ RPS 시행중인 영국, 이탈리 등에서 가중치 적용 중 |
| 119  |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배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 | 산업부 (신재생에너지과) | (대안마련) 연료전지 뿐만이 아닌 다양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배열 활용을 위해 장기적인 검토 필요(17.12월) | 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|
| 120  | 심부지열자원 개발관리 부여방안  
- 심부지열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광업권 부여 | 산업부 (광물자원팀) | (수용) 지열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, 연구결과 및 지열자원 현황,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마련 추진(17.12월) | ★ 화산지대의 지열이 풍부한 국가(독일, 페리핀, 미국 등) 위주로 법제 마련 |
| 121  | ESS에 대한 전력 시장 진입 규제 완화  
- 대용량 ESS(energy storage system) 전력시장 참여 근거 및 정산기준 마련 | 산업부 (전력진흥과) | (기초) 대용량(1MW이상) ESS의 전력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완료(전력거래소, ‘16.4.7) | 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/table>
| 122  | CO2 운송에 ISO 탱크 활용 허용 | 산업부 (에너지안전과) | (수용) 외국 운용사례 및 적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례기준 마련(‘16.12월) | ◯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
★ 미국, EU 등에서는 산업용 및 식음용 CO2의 운송 용도로 ISO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|
| 123  |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계처리 용량 확대. - 주택 등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전기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법위 확대(10→100kw) | 산업부 (전력진흥과) | (기조치)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용량(100kw)을 고려하여 자체소비 목적의 상계처리용량은 50kw가 적정(상계 하용용량 50kw로 확대, ‘16.2.29) | ★ 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|
| 124  | 심해지 해양플랜트용 배관재 방사선 투과검사 관리기준 정비 - 심해지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 필요 | 원안위 (방사선 안전과) | (수용)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(‘16.4.14) | * 검사대상물의 크기, 무게, 구조 등 물리적 특성과 용도, 작업공정(작업빈도 등), 작업장위치 등 악종의 특수성도 종합적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|

5. 신서비스 분과  가. 020 (과제 125~138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25</td>
<td>온라인 전담포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규 완화 필요</td>
<td>금융위 (서민금융과)</td>
<td>(기조치) 온라인 전담포 비즈니스 모델의 취지 등을 고려, 계약체결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 등 방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(‘16.7월 시행 예정)</td>
<td>◯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2항 개정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행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26  | 새로운 택시 앱미터기 도입  
- 스마트폰에 장착된 GPS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방식 미터기 사용 불가 | 국토부 (신교통개발과, 택시산업팀) | (기존) 현재, 카드결제기 - 스마트폰 앱(app)간 무선통신 연동을 통해 걸레서비스 제공 중이며 앱미터기 기준의 단말기 도입여부는 연구용역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(16.6월) | 자동차관리법 또는 시행령 개정  
*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|
| 127  | 차량공유서비스 본격적 확산을 위한 규정 개선  
- 면허, 자격 기반으로 Ride-sharing에 대한 차별 및 불법분류 기준 존재, Car-sharing의 경우 50대 이상 차량 등록기준 존재 | 국토부 (신교통개발과) | (대안마련) Car-sharing은 구역을 특정 지자체로 한정하여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완화 추진 (16.9월)  
Ride-sharing은 기존업자와의 형평성,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 우려 등으로 수용 불가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, 63조 |
| 128  | 운전연허 정보확인시스템 제공 확대  
-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 조례 권한을 대리운전 업종에도 허용 | 경찰청 (교통기획과) | (수용) 인터넷 앱 통해 운전자가 정보수집기관(경찰청)에 정보제공 동의하고,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 
(17년 예산반영 추진) | |
| 129  | 주차장 공공데이터 접근 편의성 개선  
-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의 일원화된 관리 및 활용 필요 | 국토부 (도시광역 교통과) | (수용) 민간에서 자료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‘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’을 구축 (16.4월)하고 지자체는 통 시스템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를 입력추진 | * 주차장법”에서 각 지자체별 교통·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급 및 수요조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부여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30</td>
<td>통신판매업신고 등 온라인 전용규제 개선</td>
<td>공정위 (전자거래과)</td>
<td>(수용) 오폰마켓에서 식당 예약 및 No-show 방지위한 예약금 선결제 서비스의 경우,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유관해석 및 지침을 알아보기 쉬운 표 형태로 작성·배포(‘16.5월)</td>
<td>* 통신판매: 우편·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</td>
</tr>
<tr>
<td>131</td>
<td>처방약의 배송 허용</td>
<td>복지부 (약무정책과)</td>
<td>(미해결과제) 유통 중 변질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,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</td>
<td>약사법 제50조</td>
</tr>
<tr>
<td>132</td>
<td>사업자 휴/폐업 정보제공</td>
<td>국세청 (부가가치세과)</td>
<td>(수용) 사업자등록 휴/폐업 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핀박스를 통해 제공, 대량조회 금지 문구는 삭제</td>
<td>* 시스템상 대량조회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은 없으며, 해당 조례화면에 “자동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할 수 없음” 문구가 게시되어 있으나 삭제조치 예정</td>
</tr>
<tr>
<td>133</td>
<td>O2O 서비스분야 법률컨설팅 지원 등</td>
<td>미래부 (창조융합 기획과)</td>
<td>(수용) ‘16년 하반기 중 O2O 스타트업에 대한 시범 자문 실시후 ‘17년부터 정례화를 추진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 홍보 및 제공</td>
<td>★ 영국 대학참여펀드(UCSF), 중국 창업실습기지, 싱가포르 기술인큐베이션 프로젝트 등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tr>
<td>134</td>
<td>임금 수령방법 개선 및 수수료 자율화</td>
<td>고용부 (고용서비스 정책과/ 근로기준 정책과)</td>
<td>(일부수용) 임금의 중간착취 폐해 방지, 분쟁증가 우려 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은 불수용, 구인자에게 받는 소개요금 한도는 해지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 ('16.9월 국회 제출)</td>
<td>◦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,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</td>
</tr>
<tr>
<td>135</td>
<td>공유민박 면적 제한 완화</td>
<td>문제부 (관광산업과)</td>
<td>(대안마련) 면적 요건 완화 (연면적 230㎡ 이하→객실 5개 이하 (주인이주객실포함)), 영업일수 제한 완화(4개월→6개월) 등 대안마련 통해 고급민박 가능토록 개선하고, 공유민박업자에 불필요한 부담 주는 ‘숙박일자 작성의무’ 대신 ‘분기별 영업일수 보고의무’로 대체 검토</td>
<td>◦ 규제프리존법 제58조 ★ 美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'면적제한' 없이 '연중 영업 가능(공유민박업자 연중 275일 이상 거주조건)'</td>
</tr>
<tr>
<td>136</td>
<td>공유민박업 관련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해소</td>
<td>문제부 (관광산업과)</td>
<td>(기초치)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·신고하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법령 준수의무가 존재</td>
<td>◦ 에어비앤비 : 숙박 예약 중개 사이트로서 개인의 주거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37  | 공공채용정보 사이트 자료 공유 요청  
   - 공공채용정보 사이트(잡알리오)의 개시글 활용하고자 하나 URL 사용제한 및 단순편집 등 활용 불가 | 기재부 (경영정보과) | (수용) 자작권법 제24조의2 등에 근거,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의 저작권 정보를 개정하고 각각의 채용정보를 별도의 URL로 표시('16.4월) | * 잡알리오 :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채용정보 사이트로서 채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서비스 제공 |
| 138  | 온라인 경매사업자 시설 확보 완화  
   - 온라인 자동차 경매사업자에게 주차장 등의 오프라인 시설 확보 요구 | 국토부 (자동차정책과) | (수용) 매매업계·온라인업계 및 민간전문가 등 참여, 민·관합동 협의회 구성 논의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 추진('16.12월) | ○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4호 및 제50조 개정 |

### 5. 신서비스 분과

#### 나. 핀테크 및 금융분야 (과제 139~151번)
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39</td>
<td>핀테크업체 전용회선 사용여부 명확화</td>
<td>금융위 (전자금융과)</td>
<td>(기조치) 현재 전자금융업자 (핀테크업체)와 전자금융보조사업자 간 전용회선 사용의무 규정 없으므로 핀테크업체에서 유권 해석 요청시 공문을 통해 사용의무 없음을 통보</td>
<td>* 규정은 ‘금융회사’와 ‘전자금융보조업자’간 접속 시 전용회선을 사용토록 함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40  | 전자금융업 보안성 심의 가이드 마련  
   - 금융회사↔핀테크기업 신규 전자금융업무 수행 시 보안성 심의를 복수 금융회사가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 | 금융위 (전자금융과) | (수용) 보안성 심의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은 없으며 핀테크업체에서 유권 해석 요청 시 공문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통보 | * 자체 보안성 심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(이하 금융회사 등)가 신규 전자금융업무 수행 전 자체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보안성을 검토 |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th>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41</td>
<td>보험업 등의 수행을 위한 전산 인력 및 설비의 외부위탁 허용</td>
<td>금융위 (보험과)</td>
<td>(기초) 클라우딩컴퓨팅 발전법에 의해 이미 원칙 수용(다만,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가능)</td>
<td>* 보험업법 및 클라우딩법에 따라 전산 인력 및 설비의 외부위탁 허용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2</td>
<td>금융회사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허용</td>
<td>금융위 (전자금융과)</td>
<td>(일부수용) 전용회선 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가상사설망(VPN)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격관리 허용할 예정(‘16.12월)</td>
<td>** 전자금융감독규정(고시) 제15조 제2항 개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3</td>
<td>전자이체서비스 이용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규제 완화</td>
<td>금융위 (전자금융과)</td>
<td>(수용) 다양한 펀테크 기술 활용 가능하도록 보안카드,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(‘16.6월)</td>
<td>** 전자금융감독규정(고시) 개정안 입법예고(‘16.4.19~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4</td>
<td>금융거래정보 제공공동의 방법 확대 - 기존 공인전자서명 방식 외에도 ARS, 녹취방식 등으로도 확대 필요</td>
<td>금융위 (은행과)</td>
<td>(수용) 현행 정보제공공동의 방식을 정보제공자 동의자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(‘16.7월 입법예고 예정)</td>
<td>**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번호</td>
<td>건의과제</td>
<td>소관부처</td>
<td>개선방안</td>
<td>비고(해외사례 등)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/td>
<td>-----------------</td>
<td></td>
</tr>
<tr>
<td>145</td>
<td>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방식을 다양화&lt;br&gt;-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서면, 전자문서 외에도 보안이메일 방식으로 확대 요청</td>
<td>금융위(은행과)</td>
<td>(기조칙) 보안이메일 전자문서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거래정보 제공통보 시 보안이메일 방식 전송 가능</td>
<td>*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보안이메일 형태로 전송 하는 방식도 전자문서 법주에 포함</td>
<td>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| 146  | 신용카드를 활용한 송금거래서비스 도입 요청<br>- 개인 간 송급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체할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혈용 요청 | 금융위(중소금융과) | (규제존치인정) 불법현금유통(카드깡) 등의 금융시장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필요 | * 신용카드가맹점 금지 사항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규정
| 147  | P2P 대출서비스업의 별도 규율체계 (전자여신대행업) 마련<br>- P2P 대출서비스 업체가 대부업자로 분류되어 불특정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제한 | 금융위(서인금융과) | (규제존치인정) 제도 개선 시 별도의 규제신설이 불가피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 검토 | ★ (미국)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여 증권법 적용<br>(일본) 대부업, 금융상품거래업 규제적용<br>(영국) 최소자본규제, 고객자금보호, 공시의무 등 규제 |
| 148  | 가맹점별 보안인증방식 도입 허용<br>- 신용카드사가 아닌 카드가맹점도 새로운 보안인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| 금융위(중소금융과) | (대한마련) 현제 카드 부정사용 손실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므로 카드사 협조가 필수. 다만, 보안인증업체가 카드사에 사업설명·제안할 수 있는 기회 마련(‘16.6월) | *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칙상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규정(법 제17조제1항)
<table>
<thead>
<tr>
<th>번호</th>
<th>건의과제</th>
<th>소관부처</th>
<th>개선방안</th>
<th>비고(해외사례 등)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149</td>
<td>신용카드 정보 저장이 가능한 PG사의 자체형태 환경&lt;br&gt;- 신용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한 전자결제대행업체(Payment Gateway)의 기준이 자본금 400억원 이상으로 제한</td>
<td>금융위 (중소금융과)</td>
<td>(수용)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완화된 재무 기준 마련(16.9월)</td>
<td>* 자본금 요건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규정</td>
</tr>
<tr>
<td>150</td>
<td>스마트폰의 신용카드 단말기 적용제외&lt;br&gt;- 여러종류의 스마트폰에 대해 신용카드 단말기 정소보호 기술기준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만족 필요하여 이중규제 발생</td>
<td>금융위 (중소금융과)</td>
<td>(규제존재인정) 스마트폰 지불결제서비스 제공시에 스마트폰은 신용카드단말기로 판단 필요. 다만, 스마트폰에 맞는 적정수준의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여 중장기 검토</td>
<td>*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 보호대책은 모든 전자적 장치(ATM 등)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이고,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은 민감정보 송수신시 정보보호가 목적</td>
</tr>
<tr>
<td>151</td>
<td>신용카드 단말기 인증 절차 간소화&lt;br&gt;- 카드단말기 보안시험 인증까지 장기간소요, 파생모델도 인증 시험항목이 동일</td>
<td>금융위 (중소금융과)</td>
<td>(수용) 시험인력 충원을 통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 단축하였고, 모바일 형식의 단말기 등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는 시험 및 인증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 할 예정(16.9월)</td>
<td>* 현재 신규 단말기의 경우 약 35영업일 이내(기존 45<del>50영업일), 파생 모델은 약 15영업일 이내(기존 25</del>30영업일) 시험인증 절차 완료 가능</td>
</tr>
</tbody>
</table>